

	-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좌우익관련 사건 및 집단희생사건, 해방 이후 불법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으로 함.	- 조사대상은 라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20가지 친일행위를 한자를 대상으로 함.	- 조사대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들 중 라일전쟁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 주위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함.	- 조사대상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은 자임.	- 조사대상은 군복무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건 중 1993년 2월 25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것과 그 전에 발생한 사건 중 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결정한 사건을 대상으로 함.
<b>조사대상 및 임무</b>	-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불능 결정 4.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 활동 등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 결정 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과 친일행위 조사 2.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조사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1. 피해 진상조사 및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2.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3. 유해 발굴수습·봉환, 사료관 건립 및 추도 공간 조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1. 군의문사와 관련된 진정의 접수 2. 군의문사 조사대상의 선정 3. 군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 4. 군의문사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5.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b>사건조사 현황</b>	- 진실규명신청접수 현황 총 10,860건(06.12~06.11) - 진실규명 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 현황 총 1,010건 (07.12) ※ 07.12월 현재 약 9% 조사결정 진행	- (17)조사대상자현황 총 146명 (07.12) - (17)반민족행위결정 현황 총 106명 (07.12) - (2기)조사대상자현황 총 226명 (07.12) - (2기)반민족행위결정 현황 총 195명 (07.12) ※ 3기는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대상은 그 이전보다 많을것으로 예상됨	- 조사개시결정현황 총 126명(2,513필지, 13,989,569㎡,공시지가 1,101억원의 토지)(07.12)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현황 총 27명(543필지 3,293,611㎡, 공시지가 315억원의 토지)(07.12) ※ 07.12월 현재 조사대상자중 21% 국가귀속결정 진행, 조사대상자는 추후 계속될 보강계획임.	- 신청접수건수현황 총 221,375건 (05.2 ~ 06.6) - 피해신고심의의결현황 총 59,198건 (07.9) - 진상조사신청현황 총 57건 (07.9) - 진상조사처리 완료현황 총 12건 (07.09) ※ 07.9월 27% 피해신고 심의의결이 진행, 07.9월 21% 진상조사 진행	- 진정접수현황 총 600건(06.1~06.12) - 조사종결사건현황 총 118건(07.11) ※07.11월 현재 20% 조사종결이 진행.

제2부

# 교과서 역사서술: 쟁점과 과제

사회 정재정(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발표 박효종(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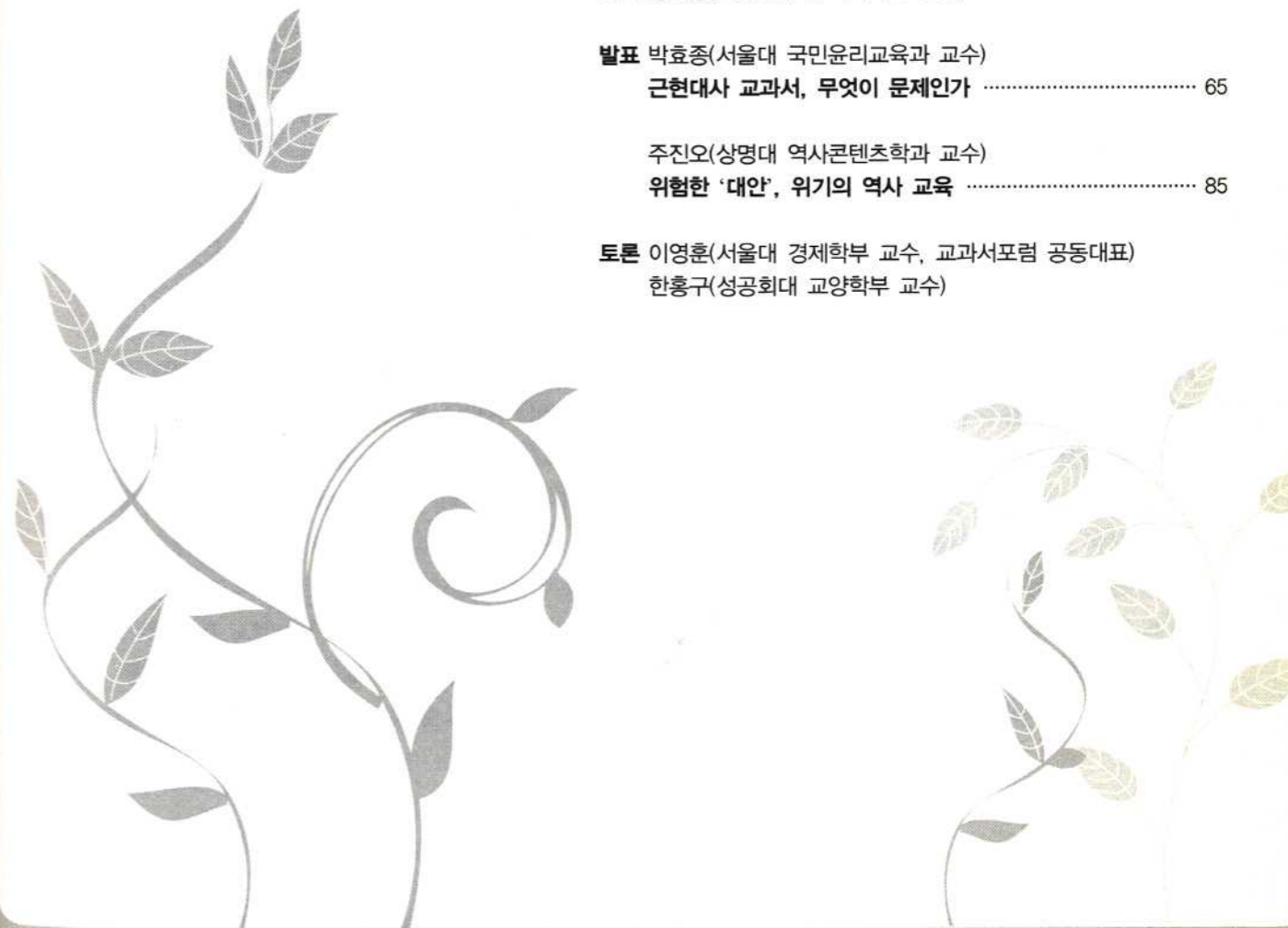
근현대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 65

주진오(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위험한 '대안', 위기의 역사 교육 ..... 85

토론 이영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근현대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박효종

## I. 문제의 제기

최근 이른바 '좌편향' 지적을 받고 있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원래 이 논란은 일부 언론이나 사회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시작된 정파적 차원의 논란이 아니다. 노무현정권 때 부터 즐기치게 제기되어온 문제였지만, 노정권과 교육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해법을 강구하기를 거부하고 “문제없음”만을 강변해온 것이다. 그동안 문제가 된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고쳐지지 않고 버티기를 고집해온 것도 그런 정권차원의 보호막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보호막이 벗겨지면서 급기야 격렬한 논란의 한 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본 발제자는 문제가 된 근현대사교과서와 관련, 좌편향적 시각에서 쓰여졌음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밝히고자한다. 또 교과서가 우편향적 시각에서 쓰여져야 비로소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일정 수준의 좌편향과 우편향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근현대사 교과서가 국정이 아니라 검인정 교과서인 만큼 ‘문화전쟁(culture war)’까지 벌일 필요는 없을 것이나, 한 국가공동체내에서 도덕적 가치나 국민의 정체성을 역사의 어느 부분에서 찾을 것인지, 혹은 보다 궁극적으로 국가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두고 강조점을 달리하며 긴장과 갈등을 벌이는 일이 허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서술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100% 담보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교과서라도 불균형적 서술이나 주관적 서술의 의혹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면 다원주의의 한계를 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적 가치를 수용하는데 좌파라고 해서 다르고 우파라고 해서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부정과 긍정으로 나누어진다면 국민적 정체성은 어떻게 길러질 것인가. 바로 교과서가 그런 것이다. 특정 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의 개인적 논문이 아닌 교육용 교과서, 즉 미래의 시민인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고 익히며 시험을 치는 대상으로서의 역사교과서라면,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관이나 서술이라면 허용되는 편향의 수준을 넘어간다고 생각된다.

학생들이 건전한 역사인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구성하는 도덕적 가치관이 어디 있으며, 또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올바로’ 또 ‘정확하게’ 인식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가공동체는 주권과 영토, 국민으로 이루어진 객관적 실체다. 그럼에도 “국가란 영혼으로 존재한다”고 설파한 어니스트 르낭(Ernest Renan)의 통찰은 두고두고 음미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영혼으로 존재하는 국가공동체의 역사는 국민들에게 자존감과 정체성, 및 정신적 뿌리를 제공한다. 국민으로서의 한 개인은 국가의 영혼에서 도덕적 정체성을 추구하고 자신의 존재의미를 확인한다. 바로 이것이 역사교과서에서 ‘국가의 이야기’가 특정학파의 주장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지향점을 담아야 하는 이유다.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피땀흘리며 일구어온 수많은 기념비적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기억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memory)’야말로 교과서의 주된 기능일터이다. 유감스러운 일은 지금 문제가 된 근현대사교과서에는 ‘진실에 입각한 기억의 사회화’보다는 ‘편향된 기억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memory)’가 현저하다는 점이다. 이념에 과잉 경도된 나머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게 만들고 또 왜곡된 사실과 잘못된 사관을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기억의 정치화’가 아닌가. 또 같은 이유로 역사적 사실들을 마치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듯 임의적으로 교과서에 취사선택해서 실었다면, 그것도 ‘기억의 정치화’다.

현재 고교 2~3학년이 사용 중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금성교과서를 비롯해 대한교과서, 법문사, 천재교육,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두산 등 모두 6종이다. 우리는 이 교과서들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가 허용되기 곤란한 수준의 편향성을 담고 있다. 더구나 이 책은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2005년 이래 교과서포럼을 중심으로 금성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에 대해 교과서 필자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2008년도 판에 이르러 약 300군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독소적인 표현이 많이 삭제되거나 완화되고 또 친북반미주의의 색채가 옅어지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제민족해방론’이나 ‘반제국주의 제3세계혁명론’, 및 ‘친북반미의 저항적 민족주의’에 입각한 기본 역사관에 관한 한, 근본적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II. 역사관의 문제점

금성사 교과서에 관한 한, 특정사건들에 대한 기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보다는 사관(史觀)자체가 문제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 여러 곳의 서술을 고친 것은 사실이나, 기본성격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관이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다. 금성사 교과서의 현대사부분을 관통하는 사관은 한마디로 ‘반제(反帝)민족해방’이며 ‘반(反)제국주의 제3세계 혁명론’이고 ‘반외세 민족주의’이다. 한국현대사를 ‘반(反)외세 자주독립’이라는 특정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사관은 1980년대를 풍미한 ‘좌파민족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외세는 세계자본주의체제와 민주주의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이다. 그 결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에는 가혹하리만큼 비판적이고 그 대척점에 선 소련과 북한에는 비굴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우호적이다.

당연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안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속에 우리 스스로 자긍심과 애정을 갖고 일구어 왔으며, 또 세계가 격찬하고 있는 성공을 거둔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교과서의

내용가운데 지나칠 정도로 균형을 잃은 서술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광복후 미국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었음을 암시하며, 특히 미국(제국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발전은 비판적으로, 김일성의 집권과 북한정권은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반제민족해방’과 ‘반제국주의 제3세계 혁명론’, 및 ‘친북반미의 저항적 민족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 1. 대한민국성립과 발전의 세계사적 주류가 반제국주의였는가

금성사 교과서는 제4부의 도입부인 249-251쪽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성립을 규정한 세계사적 조건을 1) 동서냉전, 2)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변화, 3) 제3세계의 형성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무기 없는 전쟁에서 무력 충돌로  
(이하 본문 생략)
- 2)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변천  
(이하 본문 생략)
- 3) 제3세계의 형성  
(이하 본문 생략)

교과서필자들은 상기의 내용을 1945년 이후 대한민국 성립을 둘러싼 세계사적 조건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이 우리의 정치적경제적 삶과 관련된 주도적 흐름인가. 혹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는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중요한 세계사적 조건으로서 전후 미국의 리더십 하에 자본주의 세계질서가 재건되고 (IMF-GATT체제), 미국의 원조 하에 주요 국가들이 전후 복구를 이루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며, 나아가 자본주의 진영 전체가 자유무역의 확대와 급격한 기술혁신으로 1970년대 초반까지 전례가 없는 큰 번영을 이루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바로 이러한 요소가 20세기 후반 현대 세계사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이하게도 교과서필자들은 미국의 리더십 하에서 구(舊)제국주의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커다란 번영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한국도 발전을 이룩한 현대 세계사의 주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번영의 배경을 이루는 한미동맹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이것은 그들의 역사관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혁명론에 경도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2. 미국은 신(新)제국주의 국가인가

253쪽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256쪽 <역사의 현장> “일장기 대신 올라간 것은 태극기가 아니었다. 일장기가 걸려 있던 그 자리에 필력이 있는 것은 이제 성조기였다.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253쪽의 대목은 금성사 교과서 가운데 가장 이념적으로 편향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필자들은 민족·민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통한 제3세계혁명을 해방 이후 한국민족이 나아갈 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진 연합국, 특히 미국에 의한 해방을 우리 민족의 새로운 국가건설에 장애라고 표현한 것이다. 또 256쪽에 나오는 인용문에서는 일장기와 성조기를 등치시킴으로써 미국 역시 일제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국가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광복이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 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 평등, 사적영역보호, 인권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미국을 구(舊)제국주의와 같은 국가로 간주해서 서술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3.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이었나

256쪽 남쪽에 주둔한 미군은 군정을 선포하고 직접 통치의 방식을 취하였다.”

257쪽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각각 들어온 미군과 소련군은 포고령과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미군의 포고령은 구체적인 방침을 담은 데 반해 소련군의 포고문은 주로 추상적인 원칙을 언급하였다.”

<자료1>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포고령 1호,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한다”

<자료2>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포고문,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미군정과 소군정을 대비시켜 비교하고 있는 이 대목은 금성사 교과서의 2002년 원래 서술에 비해 많이 개선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군정에 비해 미군정이 한국인에 대해 비우호적이고 억압적이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두 군정의 정책은 점령 초기의 포고령으로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다. 두 군정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군정이 펼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군정은 결사와 언론표현의 자유 등, 한국인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원조까지 제공한 반면, 소군정은 조만식선생의 경우처럼 공산주의 체제 건설에 비협조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부분적이긴 하나 북한의 산업시설을 철거하였다. 이처럼 두 군정의 차이를 포괄적인 수준이 아니라 포고령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미군정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려는 편향적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4. 대한민국은 친미·친일의 반민족국가인가

이와 같은 역사관에 입각하여 금성사 교과서는 1948년 이후의 대한민국을 여전히 미국과 일본에 종속된 사회로 파악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세력은 소수의 친미·친일 반민족세력에 불과하며, 건국 이후에

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들에 의한 장기집권과 부정부패의 역사였을 뿐이다. 1960년대 이후 형식적으로 근대화 이루어지긴 했으나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대외종속과 사회모순이 심화되었다. 이처럼 금성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이 지난 60년간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취라는,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역사적 발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관한 암시적인 사례가 247쪽에 나오는 <껍데기는 가라>이다. 대한민국 현대사 서술이 시작되는 제4부 ‘현대사회의 발전’ 도입부에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를 소개함으로써 통일이 되기 이전의 대한민국을 역사의 껍데기로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  
(중략)  
: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과연 대한민국 현대사는 과연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가. 교과서에 이 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그 안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냉소하거나 부정하는, 매우 선동성이 강한, 시를 게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집필자들의 편향된 역사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 서술과 문학적 상상과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5. ‘반외세 민족주의’는 어떻게 형성되었나

금성사교과서의 사관은 한마디로 반외세·민족해방을 표방하는 좌파민족주의이다. 이 좌파민족주의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외세반대와 제국주의적 수탈거부, 및 저항적 민족주의를 근거로 깔고 있는 좌파민족주의는 80년대 좌파운동권의 활성화와 때를 같이하여 대한민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어두운 역사”로 매도하면서 건국의 정당성부터 부정하는 ‘부친살해(patricide)’라는 독특한 담론을 표방하기 시작했다. 좌파민족주의자들은 정부수립은 물론, 산업화 등, 그들의 힘으로 이룩했다고 주장하는 민주화이외에 선배와 부모세대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성취’라기보다는 ‘문제집’이나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판독해왔다. 그들은 보수세대가 견지해왔던 반공주의와 반북주의 및 친미주의에서 ‘시대정신적 요소’와 ‘자유와 인권, 번영의 요소’를 찾기보다 ‘외세 사대주의’와 ‘반민족주의적 요소’를 찾는데 골몰했다.

분단의 극복, 통일의 성역화 반외세민족주의를 위주로 하는 ‘운동권 좌파민족주의’가 도약기를 맞게 된 이유는 복합적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해방이후부터 견지해왔던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에 의해 한국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해방자'이면서도 '점령자'이고 '수호자'이면서도 '분할자'라는 독특한 역할모델로 인식되었다. 미국은 '보호자'이고 '동맹자'이면서, '경쟁자'이기도 하고 또 '억압자'이기도 했으며, 한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은, 이른바 '야누스'와 같은 존재였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의 복합적 성격을 감안할 때, 동반자 관계와 억압관계, 복종, 감사와 질투, 우호관계와 경쟁 등, 애증의 요소가 섞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고맙고 좋은 것'이라는 인식만을 가지고 살았던 기성의 건국과 산업화세대와 달리, 미국으로부터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386 좌파민족주의자들에게 미국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 존재로 투영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625는 실패한 통일전쟁"이고 맥아더 장군은 "통일을 방해한 전쟁광"이라는 인식까지 팽배할 정도였다. 특히 미국은 인권이나 공정성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기수'라기보다는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약자에게 강요하고 '식민지적 수탈'을 서슴지 않는 '제국주의 국가'로 보여졌다. 한국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가능케 한 '시혜자'라기보다는 5.18광주민중화운동을 억압한 군부정권과 결탁한 세력, 혹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포용정책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남북화해와 통합 및 협력을 방해하는 배후세력이라는 인식이 퍼져 나갔다.

그런가하면 386운동권 좌파민족주의 활성화의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창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와 단독정부 수립 등, 광복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결(未決)의 '국가적 어젠다'가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의 광범위한 확산이었다. 좌파민족주의자들은 기성세대의 건국과 산업화에 관한 인식과 평가를 크게 문제삼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386운동권세대야말로 반공주의나 권위주의 유산은 물론, 그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는 친일유산이나 친미주의에 대하여도 '포괄적'이며 '조직적'으로 도전한 세대다.

이들은 혼란한 해방정국에서 온갖 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주국가를 건설했으며, 산업불모지에서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 선배부모세대의 자기만족에 대하여 냉소적이었다. 그런가하면 안보의 보장자로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하여 불신을 표시하는 한편, 냉전체제하에서 한반도 적화를 포기하지 않아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공주의를 혐오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부권위주의 정치나 권위주의 질서에 대하여 보인 보수세대의 묵인이나 침묵을 비굴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이 설정한 건국의 가치나 그동안 이룩해놓은 근대화 가치가 사실은 친일, 반공, 반복, 친미, 왜곡된 산업화를 교묘하게 결합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좌파민족주의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들은 민주화 시대를 맞아 기존의 친일-친미-반공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변혁을 요구하는 대안세력으로 자처하였다. 그 화두는 저항적 민족주의였다. 권위주의, 친미주의, 보수주의로 특징지어지는 기존의 질서체제를 반제 민족주의, 반미민족주의, 및 친북민족주의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철학이 금성사교과서의 사관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 III. 문명사적 관점의 결핍: 초라한 대접을 받는 대한민국건국

지난 20세기에 이루어진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역사적 사건을 꼽는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

까. 단연 1948년 8월15일의 '대한민국건국', 즉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양식을 지닌 시민이라면 당연히 알고 익혀야 할 사실이다. 마치 미국인으로서 시민권을 받을 때 미국건국에 관한 사실에 정통해야 하듯이 말이다. 제헌헌법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바, 자유와 인권, 및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제한된 정치권력을 규정한 영국의 『권리장전』이나 프랑스대혁명의 자유평등박애의 이상 및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나타난 생명자유행복추구권 등의 이상과 같은 맥락의 '문명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과서필자들이 대한민국정부수립이 단순한 일회성의 '에피소드'한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기념비적' 사건임을 간과하고 있음은 유감이다.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계기로 하여 봉건적 질서의 전근대적 '조선인'은 근대의 '한국인'으로 탈바꿈하였다. 그와 동시에 개인들의 사회적 협력과 경쟁, 대립 및 통합의 논리와 게임규칙이 달라졌으며, 새로운 질서의 규칙이 도입되고 시장과 시민사회가 약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전문적 관료기구가 작동하는 등, 개인들의 삶의 비전이 펼쳐지는 무대와 환경이 일변하였다. 대한민국 이전에는 '국민(國民)'이 아니라 '신민(臣民)'과 '백성(百姓)'이 있었을 뿐이다. 신민과 백성은 절대군주의 통치에 대상이며, 주권을 갖지 못한 존재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상 처음으로 이 땅에 근대적 '개인(個人)'이 탄생할 수 있었다. 엄격한 신분제도 마침내 사라졌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능력과 희망으로 꾸려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왕조시대와 비교할 때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민족사적 쾌거라고 할 수 있다. 건국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실현되어갈 문명사적 대전환은 우리 민족의 활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가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과 번영의 실현을 위한, 의미심장한 첫 걸음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근현대사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은 대한민국건국이 기초로 삼고있는 헌법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 및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그들을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와 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들은 앞으로 민족통일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성취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할 기본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성사 교과서에서 그러한 2세 교육을 위한 가치지향적 서술을 발견할 수 없었다. 177쪽을 보면,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학습자료로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7월 17일에 공포된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정부수립>부분에서 소개되어있지 않다. 사실 대한민국을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한 것도 제헌헌법이고 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교육권 등의 기본권을 부여한 것도 제헌헌법이다. 그럼에도 제헌헌법의 소개조차 없는 것은 교과서 필자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이다.

#### 1. 대한민국정부수립은 소수 '단정세력'의 권력장악에 불과한가

262쪽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갈등>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 정치 세력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이에 찬성한 반면, 좌익세력은 남한 정부의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곳곳에서 벌였다. 김구, 김규식 등 민족주의자들과 좌우의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던 정치세력들은 단독선거가 민족을 분열시킨다며 반대하였고, 북한과 협상을 통해 남북분단을 막으려고 하였다."

263쪽 <단독정부냐, 통일정부냐>

<자료1> 이승만의 정읍 발언(1946년 6월 3일) (내용생략)

<자료2>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내용생략)

<과제1> 당시 단독정부의 구성에 찬성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을 조사해 보자.

<과제2> 자료1과 자료2를 읽고 이승만과 김구의 입장 중 하나를 택하여 당시 단독정부 구성이 필요했는지, 또는 통일정부 구성이 가능했는지를 토론해 보자.

상기의 내용을 보면, 단독 정부 수립에 찬성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을 도식적인 이분법으로 구분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에게 결과적으로 분단의 책임을 전가하는 함의를 갖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서술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서술이 아니다. 최근 새롭게 공개된 소련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모스크바회담 훨씬 이전부터 북한 지역에서 단독정권 수립에 착수했다.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북한에 보낸 비밀지령문은 “북한에 반일적 민주주의 정당, 조직의 광범한 블록을 기초로 하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 직후 1945년 10월 북한에서는 이북5도행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946년 2월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급진적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소련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남한과 미국보다 먼저 단독정권을 수립하여 민족 분단의 단초를 열었던 것이다. 사실상 북한에서 단독정권이 먼저 수립되어 공산주의 체제 구축이 확실시 되자 불가피하게 이승만은 1946년 6월 ‘정읍발언’을 통해서 북한의 공산화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 내에서도 정권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역설했다. 미국은 처음에는 남한 내에서 좌우합작을 시도하면서 이승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에서 단독정권이 먼저 수립되고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격화되자 소련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평화를 위해 창설된 유엔은 1947년 11월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며, 이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의에 따라 1948년 1월 남한에 들어온 임시위원단은 소련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다. 같은 해 2월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태가 이렇듯 긴박하게 돌아가자, 통일정부 수립을 필생의 목표로 삼았던 김구와 김규식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막고 남북협상을 위해 1948년 4월 평양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미 인민군 창설과 공산주의 정부 수립 준비를 마친 김일성은 두 인사의 애국충정을 무위(無爲)로 돌렸다. 두 애국인사를 비롯하여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민족주의세력이나 중도세력의 노력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혼란스러웠던 해방공간에서 이렇다 할 국가건설의 현실적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결국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서술과 질문의 제기는 동서냉전과 민족 좌우분열이란 ‘경로의존적(path-dependent)’ 조건 하에서 분단이 불가피했던 점을 성찰하기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정치세력에게 분단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 2. 국민다수가 반대했던 대한민국정부수립?

264쪽 “통일 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서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5·10총선거). 총선거에는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남북협상 참가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그리고 일부 중도세력만 출마하였다.”

“출범 직후 이승만 정부는 여러 가지 도전에 부딪혔다. (중략) 일부 소장파 국회의원들도 주한 미군의 철수, 친일파 처벌, 토지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이승만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국회 안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265쪽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단독정부 수립의 과정을 밟아 나갔다. (중략) 북한은 1946년 2월 실질적인 정부 기능을 하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민주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일제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친일파를 숙청하는 한편,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대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나누어 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중략) 이렇게 명분을 쌓아 가던 북한은 남쪽에 정부가 들어서자 그 다음 달인 9월 초 곧바로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거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였다. 바야흐로 남과 북에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위의 내용가운데 문제점이라면, 첫째,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라 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에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술의 실증적 근거는 없고 오히려 그 반대가 역사적 사실이다. 건국에 앞서 1948년 5월 10일 시행한 총선거는 우리 민족이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라는 4대 원칙에 따라 치른 선거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진 선거이기도 했다. 이 역사적 사건은 43사태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한 제주도(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당시 남한 인구 1,995만 명 가운데 21세 이상 유권자 984만 명의 80%가 등록하고 등록유권자의 93%가 투표에 참여했다. 당시 우리 사회가 선거경험이 없었고, 문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관심이고 투표율이었다. 건국반대세력이었던 좌익의 조직적인 선거방해에도 국민이 참여를 통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건국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아닐 수 없다.

둘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역사적 범주로서 건국이라는 사건이었다. 자유, 인권, 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가치와 이념에 따라 새로운 문명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출발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민족의 분단이 이루어졌지만 국제법상 하나의 국가가 성립하는 데 법적 하자가 없는 자기완결적인 사건으로서 건국이었다. 교과서는 오히려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한국사에서 지니는 커다란 문명사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과 평가는 교과서필자들이 분단사적 관점에 배타적으로 심취한 나머지 대한민국 국가의 수립이 갖는 문명사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음을 뜻한다. 필자들은 분단된 국가는 별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문명사적 의미란 ‘야만’과 대립되며 노예제 불평등 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서구의 종교개혁, 르네상스, 프랑크혁명, 계몽주의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 확립된 인권과 인본주의 다원주의 등의 가치를 함유한다. 해방후 우리가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근대국가를 세웠다는 것은 문명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그것은 단순히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중앙집권적 권력기제가 수립되고 또 일부 정치사회세력이 정권력을 장악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입헌민주국가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과 사회집단을 ‘이성적인 방식으로’ 통합하는 기제로서 새로운 민주국가가 출범했다는 것은 단순히 정부라는 기능적 권력체의 수립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치·사회적 삶의 새장을 연다는 의미에서 문명사적으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점은 북한주민의 열악한 상황과 비교할 때 선명하게 나타난다.

셋째, 교과서는 부당하게 집권한 소수의 정치세력인 이승만정부가 혁신적 개혁세력의 도전에 부딪히자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다고 하여, 건국세력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기초 이념인 반공을 위정자의 집권수단으로 폄하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교과서는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개혁, 주요 산업 국유화 같은 이른바 ‘민주개혁’을 친절하게 소개함으로써 북한의 상대적 진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나아가 각종 개혁을 수행하면서 명분을 쌓아가던 북한이 남쪽에서 정부가 들어서자 독자의 국가를 수립했다고 함으로써 민족분단을 초래한 공극의 책임이 부당하게 집권을 추구한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에 있다는 취지의 서술을 반복하고 있다.

### 3. 광복과 건국, 및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건국의 정통성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제기는 좌파민족주의의 대표적 주장이다. 그 대신 이들은 광복의 의미에 주목하고 또한 상해임시정부의 의미에 주목한다. 그 결과 해방 63주년, 건국60주년을 맞는 금년에 건국을 기념할 것인가, 해방을 기념할 것인가, 혹은 건국이라는 용어가 맞는가, 대한민국정부수립이라는 용어가 맞는가, 또한 건국을 기념할 것인가, 상해임시정부를 기릴 것인가 하는, 때 아닌 논란이 불거졌다. 금성사교과서도 그 서술부분에서 암암리에 이러한 논란에서 한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역사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건국을 기념하면 광복절은 어떻게 되는냐는 문제다. 건국을 기념한다고 해서 광복절을 없애거나 깎아 내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건국을 기념함으로써 광복은 더욱 빛난다. 광복과 건국은 뿔뿔이 떨어져 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광복이 없었다면, 건국은 없었을 것이고 또 건국 없는 광복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건국이 없는 광복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산점(起算點)으로 삼아 올해를 ‘대한민국 건국 89년, 정부수립 60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문제의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나와 있는 제헌헌법 전문(前文)이 있으며, 둘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있는 현행 헌법의 전문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1948년 당시 당시 관보에 ‘민국 30년’이란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일견 나름대로의 근거와 논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역사적 근거와 논리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제헌헌법의 전문은 이 헌법을 ‘개정한다’가 아니라 ‘제정한다’로 끝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만약 일부의 주장대로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을 1948년에 재건하는 것’이라면 헌법도 제정이 아니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둘째, 임시정부 스스로가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선포했다는 점이다. 만약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1948년에 재건하는 것이라면, 어째서 임시정부가 ‘앞으로 건국이 될 경우 행해져야 할 계획이나 희망을 담은 건국강령’을 선포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셋째, 건국이라는 단어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없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여운형은 해방 직전 ‘건국동맹’

이란 비밀결사를 만들었고, 해방이 되자마자 이 조직을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해 활동을 계속했다. 1950년 대까지만 해도 정부는 물론이고 각종 신문에서도 건국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예를 들어 1958년 8월 15일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를 보면 건국10주년이나 건국절을 기념한다는 기사와 사실이 여기저기 실려 있다. 건국이란 단어를 가장 최근에 사용한 사람은 김대중 전(前)대통령이다. 당시 ‘제2의 건국’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중점사업 중 하나였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최근 들어 갑자기 일부에서 건국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알기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임시 정부는 정식으로 나라를 건국한 정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은 1948년 8월 15일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현행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정신적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을 건국의 기산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1919년을 건국의 기점으로 삼고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를 정부수립으로 격하시키려는 주장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본질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이해가 부족한 논의라는 점이다. 근대 국민국가란 영토, 주권, 국민을 기본 구성요소로 한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주장처럼, 특정 영역 내에서 ‘물리적 강제수단에 대한 합법적 사용권을 독점’할 때 비로소 근대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근대 이후 국가 만들기는 상호 모방과 강제 이식을 통해 통시적으로 확산전파되었고, 그 결과 국민국가를 기본단위로 하는, 베스트팔렌 강화조약(Peace of Westfalen)에 입각한 세계체제가 성립했다. 이런 국가간체제(inter-state system)의 구성 인자가 되려면 다른 나라의 승인이 중요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임시정부는 근대 국민국가가 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임시정부가 표방하는 헌법에서 근대 국가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였고, 이로써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한국인의 정치의식으로 자라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자국의 영토를 확정하고 국민을 확보하는 가운데 국제적 승인에 기초했던 독립국가가 아니었다. 실효적 지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실질적으로 근대 국가의 요건을 갖춘 나라가 설립된 것, 즉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에야 이루어졌다. 38도선 이남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 자유선거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구성했고 그것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COK)의 선거 감시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성립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이 지닌 민족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 노력 위에서 대한민국이 근대 국민국가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선언적·상징적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보듬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 및 인정과 그것을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의 기점으로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IV. 좌파민족주의적 관점의 과잉: 융성한 대접을 받고 있는 북한

금성사 교과서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뚱맞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떠올릴 정도로 북한의 참담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서술로 북한체제를 미화하기도 한다. 교과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전체주의적 지배체제와 그 문제

점을 중립적인 어조로 소개하고 있을 뿐, 공산주의사회에서조차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억압과 사적 영역의 소멸, 개인숭배, 및 반인권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지도, 비판하고도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1994-1997년 약 300만 명의 북한 동포가 굶어 죽은 대규모 참극과 그것을 빚어낸 북한체제의 모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 대신 중국식 개혁이나 베트남식 개혁 등, 개혁다운 개혁을 한 번도 결행한 적이 없는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북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나름의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식으로 변론하고 있다.

## 1. 북한은 정상적인 사회주의국가인가

제4부 3장에서 북한 현대사에 관한 총론의 서술적인 298쪽 (제3장)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제>에 주목해 보자.

“625전쟁의 피해를 복구한 북한은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 1인 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하여 갔다. 이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북한의 유일사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 사정의 악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 사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워 세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부분적인 개방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벗어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함에 따라 김정일이 그 뒤를 이어 북한 사회를 통치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북한체제의 반인권적 성격은 커녕 정상적인 사회주의국가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증대한 왜곡이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지배체제는 1960년대 이후 당과 정부의 실용주의적 인사들을 숙청한 다음 모험적인 군사노선을 걸었다. 그에 따라 북한의 정치는 도처의 수용소가 상징하는바, 극도로 반인권적인 억압체제로 변해 갔다. 경제는 급속히 붕괴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는 300만 명이 아사하는 대규모 참극을 빚었다. 그 와중에서도 김정일은 핵개발을 강행하여 민족의 생존과 동북아 국제사회의 커다란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금성사 교과서는 이러한 북한체제의 반인권적 전체주의적 지배체제에 대해 최소한의 인식도, 비판의식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 교과서는 북한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쓰인 각종 인쇄물 속의 사실들을 구체적인 검증도 없이 몰가치(沒價値)의 중립적인 관점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 정치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교과서는 자유와 인권 등, 민주주의의 기초 이념에 관한 한, 남한과 북한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 2. 북한의 전체주의체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299쪽 <북한 학생들의 이모습, 저모습>이라는 제재하에 나오는 <자료3> “북한 청소년의 희망(북한의 생활에 대해 쓴 책)을 참고로 북한 청소년의 희망을 재구성”

캐릭터 1: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으나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문학교에 진학해 기계 계통을 배웠습

니다. 그러나 졸업 후 전공을 살리기 어려워 군대에 가서 당원이 되려고 합니다.”  
 캐릭터2: “저는 스물 한 살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는 초대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회가 있으면 교원 대학에 진학하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캐릭터3: “저는 개성의 중학교 고등반 1학년 여학생입니다. 제 꿈은 휘파람을 부른 전혜영과 같은 인기가 수가 되는 것입니다.”  
 캐릭터4: “저는 함흥의 한 중학교 최우등 학급의 학생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하여 당이나 국가 기관의 간부가 되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만화 형태로 북한의 청소년 넷을 캐릭터로 등장시켜 그들이 소질과 희망에 따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교과서 필자들은 “북한의 생활에 대해 쓴 책”을 참고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책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한, 특정 목적을 위해 조작된 자료라는 비판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기하면 실제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주민의 사회적 지위나 주거가 세밀히 구분되고 차별되는 가운데, 하층 신분의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과 사회적 진출에 큰 제약 받고 있다. 이점은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체제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들어내고 있고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근거없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결국 교과서필자들은 자료를 조작하면서까지 북한의 현실을 미화하고 그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3. 남북한에서 이루어진 농지개혁의 특성에 대한 심각한 왜곡

322쪽 <불완전한 농지개혁, 절반의 성과>를 보면, 남한 농지개혁의 부정적 평가와 북한 토지개혁의 긍정적 평가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공포되고 1950년 3월에는 일부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농지개혁의 방식은 ‘유상매수, 유상분배’였다. (중략) 그러나 개혁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일부 지주들은 땅을 팔아치워 농지 대상이 되는 토지는 크게 줄었다. 더구나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당시, 토지 대금을 생산물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는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하였다. (중략) 결국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농민들은 분배 받은 농지를 다시 팔고 소작을 하거나 도시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 북한의 토지개혁

“북한은 1946년 2월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아래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고 3월 이를 전격적으로 시행에 옮겼다.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의 방법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다. 중략 이렇게 몰수한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토지가 없는 농민,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나누어주었다.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에서는 지주가 사라졌다.”



323쪽 <자료2> “농지개혁을 둘러싼 농민과 지주의 입장”

“저는 조상 대대로 소작을 부쳐온 농민입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이래저래 고생도 많이 했지요. 이제 광복도 되고 우리 정부도 세워졌으니 우리 같은 농민들도 살맛나게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자하니 북에서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 값을 다 주고 사야 한다지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농토를 살 수 있으면 아직까지 소작농으로 살아왔겠느냐 이 말입니다.(하략)”

323쪽 내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과서가 자료 제시의 명분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를 만화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교과서에 적합한 객관적 서술 방식이라 볼 수 없으며, 보기에 따라서는 의도적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322쪽의 내용이다. 북한의 농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남한에서는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했다고 함으로써 북한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사회주의 전체주의 사회라는 사실과 남한은 소유권이 인정되는 자유시장사회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만화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농민 캐릭터의 입을 통해 북한에서는 농민에게 토지가 무상으로 주어진 반면, 남한에서도 비싼 돈을 주고 사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서술이 왜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부정확한 서술인가 하면, 북한 사회주의사회에서 농민들에게 분배된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남한의 토지분배는 소유권이였다. 이러한 특성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과서필자들이 북한의 전체주의체제하에서의 토지분배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토지분배의 차이를 알지 못하거나, 일부러 그 차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4. 6 · 25전쟁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편향된 서술

268쪽 <깊어지는 갈등, 계속되는 무력 충돌>

“남과 북에 들어선 두 정부는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계속해서 통일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남북 정부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져 갔다. (중략) 미국과 소련은 1948년 말에서 1949년 초에 걸쳐 일단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남과 북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였으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원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중략) 남북 사이의 무력 충돌도 적지 않았다. 지리산을 비롯한 남한 곳곳에서도 북한을 지지하는 무장 유격대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38도선 곳곳에는 국군과 북한군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쉴 새 없이 일어났다. 이러한 충돌은 1950년에 줄어들었으나 불안정한 정세는 계속되었다.”

269쪽 <자료2> 소련과 중국의 북한 지원

1949.7~1950.4. 중국 내전에 팔로군으로 참전했던 조선의용군 출신 병력 약 3만 명이 귀국하여 인민군에 편입

1950.3~4. 김일성, 소련과 경제문화 협정차 비밀 방문, 스탈린과 회담, 스탈린 북한의 통일과업개시(전쟁)에 동의

1950. 5. 김일성 베이징에서 마오쩌둥과 회담, 마오쩌둥 찬성, 미국 참전시 중국군 파병 언급.

<자료3> 애치슨 선언

(내용 생략)

<과제2> 자료2, 3을 통해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추론해 보자.

<과제3> 자료2를 보면 북한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았는데, 남한은 미국에게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조사해 보자.

위의 내용을 보면, 625전쟁의 원인과 관련하여 교과서의 268쪽 서술은 이른바 ‘내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과 북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두 정부가 들어서서 물리적 충돌을 거듭하다가 결국 전면적인 전쟁으로까지 번졌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269쪽 서술에서는 자료와 과제를 제시하는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이른바 ‘유인설’을 제시하고 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전쟁 건의를 승인하고 지원을 약속한 사실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국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과제2에서 상호연관적으로 그 이유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에 의해 제기된 내전설과 유인설에 나름의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625전쟁의 원인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최근의 연구들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서 미국의 봉쇄정책을 돌파함으로써 냉전에서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고자 했던 스탈린의 세계 전략을 625전쟁의 기본 요인으로 중시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들은 소련 붕괴 후 공개된 모스크바 공문서관의 비밀 자료에 근거하여 1949년 3월 이미 김일성이 남침의 가능성을 스탈린에 타진하였다가 거부당한 바 있으며, 이후 스탈린은 중국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소련이 핵을 보유하게 된 상황의 변동을 맞아 중국과 협조하여 미국의 봉쇄망을 분쇄하여 냉전에서의 결정적인 승기를 잡을 목적으로 전쟁을 승인하고 기획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할 때, 625전쟁은 북한, 소련, 중국 공산 북방 3국이 사전에 공모하고 합의하여 일으킨 전쟁이었다. 북한은 정권을 수립하기도 전인 1948년 2월 이미 인민군을 창설했다. 정권을 수립하자마자 김일성은 소련으로 달려가서(1949. 3) 스탈린에게 남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소련문서들은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남침을 도와줄 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즐기치게 요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의 요청을 거부하던 스탈린은 1950년 1월 말 중국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태도를 바꿨다. 남침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사전에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할 것과 남침 전에 반드시 마오쩌둥의 동의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1950년 2월 초 스탈린은 소련 군사고문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선제타격작전”으로 알려진 남침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때 소련어로 작성된 작전 지도는 현재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5월 중순 베이징에서 마오쩌둥을 만나 남침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만약 미국이 전쟁에 개입한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겠다고 김일성에게 약속했다. 마오쩌둥은 이미 이 회담 전에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군대를 인민군 조선의용군 2개 사단으로 편성하여 북한으로 보냈다. 다시 말해 북한군 일부는 중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병력이라는 뜻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3단계 계획에 따라 북한은 6월 25일 새벽 38선 전역에서 걸쳐 남침을 강행했다.

교과서는 이 같은 최신의 연구들에 주목하지 않은 가운데 ‘내전설’과 ‘유인설’의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학생들을 625전쟁이 미국과 혁명적인 한국 민중 사이에 벌어진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결론으로 유도하고 있다.

## 5. 6·25전쟁의 불가치적 서술: 6·25전쟁의 성격은 무엇인가

6·25전쟁은 국제 공산주의세력과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을 공산주의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었다. 한국인은 자신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받아 그 전쟁을 방어하였다. 교과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그에 관한 국민적 기억을 혼란시키고 있다.

6·25는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뿐 아니라 우리민족의 마음속에 남긴 상흔이 그에 못지않게 컸다는 점에서 재발되어서는 안되는 비극이다. 하지만 이처럼 민족의 관점, 혹은 평화주의의 관점 혹은 통일의 관점에서만 전쟁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른바 조국해방이란 명목아래 북한이 도발한 전쟁으로 당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록 결과는 휴전으로 봉합되고 말았지만, 6·25전쟁은 전체주의와 통제경제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방어한 전쟁으로 평가받아야한다. 교과서가 이점을 도외시하고 전쟁의 피해, 경제적 피해 등만을 강조한다면, 이 전쟁에 참전했거나 거기서 죽거나 부상한 많은 사람들은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에 동원되어 의미없는 행동과 희생을 한 것이 된다.

물론 6·25를 배타적으로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로만 평가할 필요는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6·25는 전체주의세력의 공격에 맞서 자유주의세력이 이에 방어했다는 문명사적 의미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것은 독일이나 일본의 공격에 맞선 연합국의 가치지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6·25는 실패한 통일전쟁이 될 뿐이다.

## 6. 통일과 좌파민족주의

이처럼 네 가지 점에서 금성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우호적 서술이야말로 ‘반제 민족주의’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북한의 실상과 참상은 상식화되어있다. 그럼에도 대량아사, 인권탄압, 탈북난민자의속출, 핵개발 등 북한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혹은 한국의 경우와 어느 정도 균형있게 서술하기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302쪽에서 루이저 린저의 북한 이야기를 실어 “김일성의 교시는 곳곳에서 인용되며 거기에 인민들은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대목도 불가치적 서술의 한 사례이다.

북한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침묵은 그 이외에도 많다. 김일성이 6·25전쟁이후 박헌영의 남노당계와 소련파, 연안파등을 숙청한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김일성의 권력욕과 권력강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서술은 없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1인지배체제가 오늘날 북한 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수령전체주의 체제성립의 토대가 되었다는 서술 역시 찾아볼 수 없다. 권력의 부자세습에 대하여도 그 어떤 비판적 서술이나 평가도 찾아볼 수 없다. 경제부진과 관련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군부통치를 이해하는 키워드인 선군정치는 용어조차 소개하지 않고 있다.

식량난과 탈북자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다. 대량아사,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마양밀매, 위조달러제조, 한국인 및 외국인 납치 아웅산 및 KAL기 테러 등에 대해서도 일절언급이 없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에 대해 314쪽을 보면 “1990년대 전반 막대한 군사비를 감당하기 어려

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제사회에 제기되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왜 이런 외눈박이 서술이 가능한 것일까. 한국에 대해서는 ‘외재적 접근’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을 하는 것일까. 288쪽을 보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아래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체제로 나아간 것이 유신체제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북한에 대하여는 어떤가. “북한은 1972년 헌법을 개정하여 사회주의헌법을 공포하였다. (중략)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를 명확히 하였다. 주체사상을 헌법에 최초로 규범화함으로써 사회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또한 국가주석제를 도입하여 김일성을 주석에 추대하였다. 주석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수령의 유일한 영도체제를 확립하는 권력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p. 303).”

결국 북한체제에 대한 몰이념적 무비판과 우호적 서술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민족끼리’라는 좌파 민족주의의 과잉이다. 분명히 한반도의 대립되는 두 체제, 즉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주체사회주의’는 20세기 문명의 심장부에 내재해온 자유주의와 전체주의간의 깊은 긴장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세계사의 전반적 흐름에 주목해보면, 국가사회주의와 계획경제는 자유와 인권, 자율, 사적영역의 보장, 인본주의라는 인간의 천부적 가치에 반하는 체제와 이념이었음이 판명되고 있다. 바로 그와 같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가치추구로 인하여 국가사회주의는 실패의 조짐을 보였고 결국에는 내면에서부터 붕괴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국가건설자들은 혼란된 해방공간의 와중에서 암중모색하는 가운데 이념과 가치적으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 또한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공감 및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우리앞에 놓인 민족적 대과제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어떤 통일이라도 최고의 선, 민족이 최고의 가치라는 식의 통일과잉주의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통일자체가 ‘최고의 선(summum bonum)’으로서 다른 모든 가치들을 규제하고 아우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분명 남북한의 통일은 민족사에 부여된 성스러운 과제이다. 그렇지만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유와 인권이란 문명사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통일은 자유와 인권에 바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적 가치가 아직도 그와 같은 문명 국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으로 확대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북한주민들은 전형적으로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우화’에 나오는 존재처럼, 쇠사슬에 묶여 태양을 보지 못한채 그림자만 보며 어둠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햇빛을 비추어 대명천지(大明天地)의 문명사적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진정한 ‘통일’의 의미라고 할 것이다.

## 7. 이질적인 남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부족

우리는 민족통일이라는 희망적 생각에 성급히 도취되기 전에 남북의 체제와 가치지향성의 차이에 대하여 냉철하게 바라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냉엄하기 짝이 없는 남북관계의 현실은 “민족은 하나” 혹은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가 수사(修辭)를 넘어서서 손에 잡힐만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하는 질문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어원적으로 볼 때, 민족의 영어개념인 nation은 ‘태어났다’는 의미를 갖는 라틴어 natus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혈족과 혈연의 개념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뿐, 같은 피이기 때문에 특별한 친화성을 가진다든지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수렴된다는 의미는 없다.

생각해 보면 60년이 넘는 세월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완전히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아왔다. 그 이질성이란 '개고기'를 '단고기'로 부르는 수준을 훨씬 넘어간다. 또한 정치체제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졌다. 남한의 '시민들'과 북한의 '인민들'은 비슷한 가치와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기 보다는 상호간에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쪽에서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이 보장되거나 지향하는 체제속에서 살아왔지만, 북한은 일인전체주의, 반인권 명령경제 일인숭배 등, 20세기의 전제정과 같은 체제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문화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서 '문명과 야만의 차이', '민주정과 전제정의 차이' 정도가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랜 역사속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특히 일제강점하의 고통이라는 과거역사의 기억을 나눠 갖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공통점만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간극과 심연을 메우기 어렵다.

"민족끼리"를 강조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주체사회주의를 용광로(鎔鑪)에 넣어 하나로 녹일 수 있는가. 혹은 시장경제와 명령경제를 통합시켜 '민족경제'를 만들 수 있는가. 또 "민족끼리"를 강조하면,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우리식사회주의'도 아닌, 이른바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는가.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반(半), 주체사회주의를 반(半)으로 혼합한, '혼합체제'가 가능할 것인가. "민족끼리"의 통일론이나 이념과 주의를 초월하자는 주장, 심지어 "민족은 핵문제도 초월한다"는 주장은 '민족'이라는 공통점만 보자는 것일 뿐,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들에는 눈을 감자는 주장이외에 다른 아니다.

"민족끼리"라는 귀속적 가치에 호소하는, 무원칙적인 감성적 통합주의 보다는 남과 북의 가치가 얼마나 다르고, 자유민주주의와 주체사회주의가 얼마나 이질적이며, 또 시장경제와 명령경제, 혹은 '다수의 민주적 지배'를 뜻하는 '폴리아키(polyarchy)'와 '일인에 의한 전제정'을 의미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사이에 얼마나 커다란 심연이 놓여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의 비전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는 '영원한 빛 아래(sub specie aeternitatis)' 인류보편적 가치로 통용되는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공감대가 세계적으로 널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나 통일과 같은 원대한 목표를 말하는 경우에도 인권이나 자유, 자율 등의 가치를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를 지향하는 민족주의에도 '건강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민족주의에 '건강한 철학'이 있으려면, 반인권이나 전체주의와 같은 사악한 가치들을 포용한다는 수준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적어도 세계사적 흐름이나 문명사적 가치와 같이 가야 한다. 세계사적 흐름이나 문명사적 가치와 괴리를 보일 때 '맹목적인 민족주의'로 함몰되는 위험과 비극적 사태를 함의할 수밖에 없다.

민족주의에서 오로지 통일만 말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 자유를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폐쇄적이고 기형적인 민족주의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피와 땀을 흘려 쌓아올린 가치들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초위에서 문명사적 가치나 헌법적 가치를 양보하여 통일을 성취했다고 한다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유로 자유와 인권을 양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자유나 민주주의, 인권 등은 값으로 친다면 너무나 소중한 '그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invaluable)' 어떤 것들이다.

## 8.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금성사 교과서필자들의 북한과 관련된 서술에 있어 북한의 전체주의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실로

유감이다.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는 남한의 독재체제와 비슷한 것이 아니다. 전체주의와 관련, 칼 프리드리히(C. Friedrich)와 부르진스키(Z. Brzezinski)는 전체주의적 모델을 제시했다. 1950년대의 소련이 대상이었다. 그들에 의하면 전체주의모델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첫째, 교의 체계로 구성된 공식적 이데올로기
- 둘째, 일인의 독재자 및 전 인구중 소수로 구성된 단일정당
- 셋째, 당의 지도를 강력히 지지하기 위한 공포적 비밀경찰의 통제체제
- 넷째, 신문, 방송, 영화 등의 효과적인 매스컴에 대한 당의 완전 독점
- 다섯째, 군에 대한 거의 완전한 독점적 통제
- 여섯째, 전체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와 지도

북한이 이러한 전체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치사회적 체제라는 것을 모르면 2007년 평양정상회담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벌인 해프닝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그는 북한에서 '인민'이란 용어를 버젓이 방명록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쓰는 모습을 보였다. 한번은 만수대의사당에서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고 썼고 또 한번은 남포의 서해감문에서 "인민은 위대하다"라는 문구를 남기기도 했다.

노대통령이 거리낌없이 사용했던 '행복'이나 '인민주권' 혹은 '행복'의 표현이 문명사적 흐름에 둔감한 표현이며, '문명과 야만', '민주와 반민주', '인권과 반인권'의 차이에 대한 감수성이 약한 표현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인민이라는 개념도 부르주아지가 거세되고 프롤레타리아트만 있는 계급적 개념이다.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을 포용하는 것과 북한체제의 사악한 본질을 포용하는 것은 다르다. 북한주민들은 인간의 기본권도 유지할 수 없고 기초적 행복권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런 무식은 적악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건강한 체제'고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주권'인지에 대한 명확한 문명사적 이해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것 없이 몰가치적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앞에 다른 모든 가치들을 창백하게 만드는 일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그런 실수를 금성사 교과서 필자들이 북한에 관한 서술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유감이다.

## VI. 결어

한국사회에서 교과서의 위상은 각별하다. 교과서는 중고등학교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기본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내신 성적의 기초가 되는 학교시험에서도 핵심적 자료가 되며, 특히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시험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이런 교과서에 대하여 한국의 현대를 살아온 한국인의 삶은 물론, 풍요하고도 역동적인 사회·정치·경제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는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런 기대가 충족되고 있는가. 본 논의에서는 금성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런 기대를 무색케 할 정도로 편향된 역사관과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초하여 해방과 건국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과 민주주

의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한국인들의 삶의 질과 궤적을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금성사 교과서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실(史實)에 대한 충실성, 즉 '리얼리티'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사실의 나열만이 교과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의 기술에는 필연적으로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 평가야말로 학생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평가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인들이 광복 63년, 건국 60년 동안 피땀을 흘리며 일구어온 역동적 삶과 자화상이 충실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룩해놓은 성취가 갖는 문명사적 의미와 민족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은 '반(反)제국 민족해방', '반외세 민족주의' 때문이다.

교과서는 후세대교육을 위한 거울의 기능을 하는 만큼, 일부 국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사실과 긍정적 평가만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나르시시즘'을 상기시킬 만큼 의미없는 자기도취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성찰적 서술이나 비판적 평가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성찰이나 비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정체성까지 훼손하는, 근거없는 자기편파 사관(史觀)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 금성사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는 사실의 왜곡에 대한 문제점보다 사관의 편향성이 두드러진다는 문제점에 치중했다. 생각해 보면 사실의 기술과 사관의 선택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관에 따라 사실을 취사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편향된 사관의 이유는 무엇일까. '저항적 민족주의'의 기조가 되었던 '제국주의 대 반제국주의', '민주 대 반민주', '통일 대 반통일', '독재 대 반독재', '친일 대 반일' 등의 단순한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순 이분법에 몰입하다보니 전(前)근대국가에서 근대민주국가로 빈곤에서 부국화를 향해 나아가는 '신유목민'의 풍요로운 모습을 담는데 실패하고 있다.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품고서도, 최선을 다해 아탈리(J. Atalie)의 표현을 빌면 '신유목민'처럼 살아왔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이러한 약동하는 삶의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채 친일파청산이 안된 나라, 미제국주의에 종속되어 독재자들 밑에서 살아온 비천한 삶처럼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분단의 역사에 천착한 결과 문명사적 함의와 민족사적 함의를 갖는 사건들을 평가하는 안목을 가질 수 없었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진력한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분출하는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다보니 우리사회에는 항의와 비판은 있되 건설은 없는 사회로 기술되고 있다. 또한 건국이나 부국화에 힘을 쏟은 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한 '국가인'이 아니라 집권욕에 사로잡혀 행동한 '권력 의지의 화신'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근면과 창의를 정신을 갖고 치열한 삶을 살아온 국민들까지 독재자 밑에서 순응한 수동적 시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과서 저술에 참여한 역사학자들과 정치사경제사사회사문화사사상사 등을 전공한 사회과학자들과의 학제적 교류가 경시되었던 탓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교과서가 한국의 현대사와 관련, 정치사경제사사회사문화사사상사의 제반분야에서 이룩한 선진적인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섭취하고 있지 못한 편향성을 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하루바삐 역사학과 사회과학 간의 허심탄회한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 위험한 '대안', 위기의 역사 교육

주진오

### I.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에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고등학교의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의 교과서에 대해서 대통령은 물론 정부여당까지 나서서 공세를 취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색깔논쟁의 책사는 교과서 포럼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일부 보수단체나 언론이 제기하던 문제를 학자들이 나서서 체계화하고 이론적인 수사를 더하여 학문적이나 교육적 논쟁이 아닌 정치이념적 논쟁으로 몰고 갔다. 그 결과 이들은 일부 보수언론의 총애를 받았고 마침내 2004년 권철현 의원을 통해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색깔공세를 취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들의 시도는 지난 정권까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권력을 기반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뒤늦은 수정논란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발간하여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책은 일단 목차 및 체제 구성 면에서 현행 교과서와 달리 검정 기준의 제약을 받지 않았으며 그만큼 자유로운 형식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집 방식도 사진 설명과 별도의 박스를 활용하며 다양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세련되게 담았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과서보다 뒤늦게 출판되었다는 점, 교육과정을 준수할 필요 없이 검인정 시스템과 무관하게 제작되었다는 점에 있다. 현행 교과서들에는 대체로 5-6명의 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연구자들은 3명이 참여했던 금성출판사를 제외하고는 각 출판사 별로 1-2명에 불과한 반면, 이 책에는 무려 12명의 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그리고 현행 교과서의 경우에는 집필에 참여하는 과정이 개인적 인연으로 이루어졌으며 출판사 간의 의견교환이나 유대관계가 전혀 없었던 반면에 교과서 포럼은 조직적 차원에서 작업을 진행시켰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포럼이 지은 책은 '대안교과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교육현장에서 교과서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대안교과서'는 2006년 교과서포럼이 발표한 시안과 비교해볼 때 달라진 점도 많으며 그동안 쏟아진 비판에 대해 저자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과연 이 책의 내용이 '대안 교과서'라는 표방에 값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책의 내용과 거기에 투여된 역사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교과서'로서 필요하고 적합한

한 수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

이에 주진오, 박찬승, 홍석률은 『역사비평』 2008년 여름호에서 ‘대안 교과서’가 도저히 교과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무수한 사실의 오류를 담고 있으며 역사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sup> 이에 대해서 『시대정신』 2008년 가을호에서는 ①안병직, ②이영훈 그리고 ③ 교과서 포럼 명의의 반박을 게재하였다.<sup>2)</sup> 이 글에서는 이들의 반박에 대한 재반론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들은 ③에서 자신들을 식민지 정체론으로의 회귀 및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와 같이 일본 극우파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연구자로서 금도를 넘었다고 보는 거친 표현도 적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연구자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험구로 우리의 지적 능력과 도덕성에 흠집을 가하고자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런 식의 무책임하거나 악의에 가득 찬 비평은 지난 60년의 지성사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해 온 교과서 비판이 얼마나 반지성적 또는 반학문적인 것이었는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지 않는 모습에 질리고 말았다. 남의 비판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기를 권하고 싶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 맡아서 온갖 독설을 뽐내는데 안병직은 학문적 입장에 충실한 것이고, 그 연구소에 가서 근현대사 교과서를 ① 자유민주주의관의 왜곡 및 훼손: 포퓰리즘적 민주주의관, 대의제와 법치주의 경시, 반체제·반정부 활동 옹호 등 ②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중도파와 좌파 중심의 건국운동 옹호, 대한민국 현대정치사 전면 부정, 분단 원인의 왜곡, 사회주의 체제 선호 등 ③ 자화적 대한민국관: 민주투쟁사 관점의 역사 기술, 새마을 운동 성과 폄하, 친북적 역사 기술 등 ④ 분열, 투쟁, 혁명의 역사관 주입: 반제국주의적 역사 인식, 민주투쟁사 중심의 역사 인식 등 ⑤ 북한체제에 대한 내재적·중립적·우호적 평가: 내재적 접근, 북한에 대한 비판 회피, 친북적 자료의 활용과 사실 왜곡 등 ⑥ 통일지상주의의 확산과 연방제 통일방안의 선호: 감성적인 통일지상론 확산, 자유민주적 통일 언급 회피, 연방제 통일방안 선호 등 ⑦ 반미 확산 의도와 친중 성향의 강화: 미군정의 전면부정, 친중 성향의 강화, 반미·자주 입장 등 ⑧ 반시장·반기업 논리의 확산: 반시장적 이념, 반기업적 정서, 산업화 성과에 대한 폄하 등 ⑨ 반세계화 경향의 강화: 개방에 대한 비판, 세계화의 역기능 부각 등으로 비판한 박효종은 학자적 태도에서 한 것인지 반문하고자 한다. 그리고 ②에서 ‘민국론’을 주장하는 역사학자를 ‘논문도 아닌 강연이나 언론을 통해 떠벌이고 있는 것은 연구자로서 금도를 넘은 경망스러움의 극치’라고 매도하는 이영훈은 과연 예의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검인정을 통과하여 학교 교육현장에서 몇 년 동안이나 사용되어온 금성 교과서에 대해서 “반국가적 통일운동 교재로서의 특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sup>3)</sup>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60년 지성사’에 유례가 있는 일이었던가? 나아가 이영훈의 금성교과서의 세계사 인식이 1983년 북한에서 출간된 『현대조선역사』와 동일하다는 지적을<sup>4)</sup>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똑같은 취지로 질문했던 점 등에서 확인되는 것은

1) 그밖에도 박한용의 글도 활용하였다. 이 글은 별개의 논문으로서 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발표자가 모아 정리하였다. 이 글들은 곧 서해문집을 통해 발간될 예정이다.  
2) 안병직, [한국근현대사의 체제와 방법], 이영훈, [우리에게 국사란 무엇인가], 교과서포럼, [역사비평의 대안교과서 비평에 대한 반박] 등이다.  
3) 교과서 포럼이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요구를 하면서 제시한 문제점이다.  
4) 이영훈, 앞글, 286쪽. 그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바로 교과서포럼 편, [한국현대사의 허구와 진실]이다. 여기서 그는 “이같은 지적은 자칫 매카시즘이라는 역공을 초래하기 쉽지만, 그 점이 두려워 두 책의 관련서술을 대조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그만둘 수는 없다. 그럴 때 위와 같은 결론이 도출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들이 한나라당의 책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자유주의 문명사관을 내세우면서 어느 나라 자유주의가 이런 색깔론을 동료 학자에게 덧씌울 수 있으며 이것이 과연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의문스럽다.

안병직의 경우 ①에서 ‘현재 한국근현대사 6종은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민중운동사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기술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경시되거나 부정적으로 기술되고 대한민국의 해체를 전제로 통일을 전망하지 않을 수 없도록 기술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진보진영의 한국근현대사관을 기초로 하는 정부의 집필지침에 따라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교과서는 2003년부터 실시되었으므로 진보진영의 역사관을 반영하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하게 되어 있다. 둘째, 현재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연구와 교육은 진보 진영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 역사학계가 아직까지 근대과학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한국근현대사를 제대로 서술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민중운동사와 한국근현대사는 기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민족주의와 자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같다’, ‘한국근현대사의 발전방향은 주어 진 것이다. 대한민국을 택할 것인가, 북한을 택할 것인가’라고 하여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마치 북한을 택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색깔론의 전형을 보여 준다.

이는 교과서 집필과정에 대한 무지를 보여 준 것이며 한국의 역사학계에 대한 지나친 모욕이다. 교과서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김영삼 정권 시절에 작성된 것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바로 여기서 이들이 교과서에 대한 공세를 벌이는 배경에는 분명한 정치적 이유가 개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같은 정치적이고 이념적 공세의 장으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끌어들이 역사학계와 역사교사들을 총체적으로 모독하는 세력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학계는 대체로 침묵해 왔다. 그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고 도무지 토론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취하고 있는 공세는 이제 단순히 교과서 문제를 넘어서서 교과서의 검인정 발행체제에 대한 위기와 역사학의 전문성을 무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침묵하던 역사학 관련 학회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역사교사들이 전국역사교육자선언에 뜨겁게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의 단초에 불과하다. 이 글은 비록 역사학계를 대표해서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 교과서포럼의 주도세력과 의도

### 1. 주도세력의 개관

그동안 몇 차례 단편적으로 교과서포럼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그들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려는 시도는 없었기 때문에<sup>5)</sup> 그들의 면면을 살펴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포럼의 중요 인사들의 인적사항과 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5) 전우용, 「역사인식과 과거사 문제」 『역사비평』, 2004년 겨울호; 임대식, 「과거사 내전을 앞두고」 『역사비평』, 2005년 여름호; 안수찬, 「2006년 진보, 세 가지 딜레마」 『인물과 사상』, 2006년 6월.

공동대표:

박효중 (서울대 - 정치학), 이영훈 (서울대 - 경제학) 차상철 (충남대 - 역사학)

운영위원회:

강규형 (명지대 - 역사학),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 정치학), 김영호 (성신여대 - 정치학), 김일영 (성균관대 - 정치학), 김종석 (홍익대 - 경제학), 김주성 (한국교원대 - 정치학), 신지호 (서강대 - 정치학), 유석춘 (연세대 - 사회학), 전상인 (서울대 - 사회학/운영위원장), 정성화 (명지대 - 역사학), 차상철 (충남대 - 역사학), 함인희 (이화여대 - 사회학) 6)

이들은 대체로 네 그룹으로 나뉘는데 어느 경우에는 서로 겹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첫째 그룹은 안병직과 이영훈으로 대표되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일부 경제사학자들이다. 처음에는 이영훈 혼자 참여했으나 '대안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주익종과 김재호가 가세하였다. 둘째 그룹은 유명익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내에 설립한 현대한국학연구소 관련 인사들이다. 여기에는 차상철, 강규형, 정성화 등 서양사학자들과 전상인, 김세중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그룹은 올드라이트 사회과학자들로서 박효중, 김광동, 김일영, 유석춘 등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 그룹은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하다가 전향한 세력으로서 신지호, 김영환, 김영호 등이 대표적이다.

그 가운데는 미국 박사 출신의 사회과학자들이 압도적이다. 이들 중 국내 학위를 받은 사람은 김일영, 이영훈 그리고 김광동 뿐이며(전체인원 중 21%차지) 그 가운데도 일본에서 학위를 받은 신지호(7%)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72%). 전공을 보면 총 14명 중 정치학이 6명(43%), 사회학이 3명(21%), 경제학이 2명(15%), 역사학이 3명(21%)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역사학 전공자는 한국사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으며 모두 서양사 전공자들이다. 서양사 전공자들 역시 '역사학' 전공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시비를 서양사 전공자들이 맡은 것은 국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포럼에 역사학자가 부재하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합류한 의미 이상을 지니기 어렵다. 더구나 이들은 포럼의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령을 보면 1940년대 출생자가 2명(15%), 1950년대 출생자가 8명(57%), 1960년대 출생자가 4명(28%)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이 과연 '뉴라이트'가 맞느냐는 근원적인 문제이다. '뉴라이트'가 소위 '과거 운동권 출신'이 전향해서 신우익을 자처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라면? 이들 운영위원들 대부분은 여기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 이전부터 보수언론으로부터 젊은 보수논객으로 충애를 받아온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뉴라이트가 아니라 이미 전부터 우파였던 '올드라이트' 인 셈이다.

6) 최근 발표된 운영위원 명단에는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 국회의원이 된 신지호를 비롯하여 유석춘, 함인희 등이 빠지고 그 대신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의 필자로 참여했던 김세중(연세대), 김영환(시대정신), 김재호(전남대), 주익종(낙성대경제연구소), 그리고 이명희(공주대) 등이 추가되었다. (교과서포럼 홈페이지에 실린 [금성출판사 발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한국근현대사」 문제점 시정 민원제기에 실린 명단 참조]

7) 신지호는 "뉴라이트의 주체세력은 좌파 운동권 출신의 40대와 역시 40대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으로 못 박고 있다. (문일 국민일보 논설위원과의 인터뷰, "좌든 우든 이제 더 높이", 「국민일보」 2006. 5. 19.

## 2. 교과서포럼의 의도

### 1) 왜 교과서인가?

사실 교과서 포럼은 일본의 대표적 극우 교과서 단체인 '새역모'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들의 등장배경, 인적구성, 활동방식, 보수진영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부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자학사관이라고 비난하는 점도 그렇다. 앞으로 직접 교과서를 집필하려고 하면서 그 후에는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 드러나는 양상으로 보면 이들이 집필은 물론 검정위원으로 참여하려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검인정을 통과하면 온갖 보수세력을 동원하여 채택되도록 분주하게 움직일 것은 눈에 보듯 뻔하다.

사실 뉴라이트에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주된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은 순수한 역사교육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기대어 보수정당에 대한 충성경쟁을 통해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권으로 진입하려는 엽관세력들이 많다. 어쨌든 이들은 당시 노무현 정권과 진보세력을 친북좌파로 매도하는데 있어서 한국근현대사 논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선동정치적 수법으로 그들에게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겪을 혼란은 안중에도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집권할 때인 1998년 김영삼 정권 때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하여 만들어진 집필지침에 따라 김대중 정권 시절에 검인정이 이루어졌던 책이다. 결국 이 교과서와 참여정부 등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정치공세로 이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과서에 대한 공세는 그 후에도 월간조선, 국방부 군무회의의 그리고 2004년 권철현의 국정감사 발언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어김없이 당일로 보수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이데올로기 공세로 이어졌다.<sup>8)</sup>

얼마 전 있었던 자유교육포럼, 뉴라이트교사연합, 북한민주화포럼 등 실체도 불명한 사람들이 폭언을 하면서 한국 근현대사 고교교과서 개정(改正)을 위한 국민운동을 선언하자 바로 「동아일보」는 사실을 통해 "나라에 침 뱉는 교과서 찢어야 나라 장래 있다"라고 도저히 품격있는 언론이라면 할 수 없는 선동적 제목으로 대중을 자극했다.

### 2) 그들은 어떤 교과서를 꿈꾸나?

그들은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포스트 식민주의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의도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던 민족주의를 해체해자는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역사적으로나 특히 우리 현실에서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부정적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비판을 해 왔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를 전통적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민족주의가 완전히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은 민족적 입장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세력들을 역사의 부채에서 해방시켜 오히려 역사의 주인으로 탈바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국제협력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친일 세력과 친미세력을 찬양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8) 이에 대해서는 2004년 10월 14일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공동주최의 '한국 근현대사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따진다- 집필에서부터 교육까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 기준과 검정 시스템」 참조 바람, 이 글은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회, 2005. 에 실려 있다.

이들이 자신을 신우익이라고 하는 주장도 새롭지 않다. 그것은 그동안 극우 세력들이 늘 써오던 역사의 단순화와 자기중심적 해석이라는 면에서 다르지 않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북한의 논리를 수용하여 식민지반 봉건사회론, 주체사상을 퍼뜨려 오던 극단적 집단들이 당시 그러한 논리를 양식 있는 학자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친북좌파라는 색깔론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진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안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왼쪽에서 붉은 깃발 흔들면서 자신들 따라 오지 않는다고 매도하더니 이제 와서는 오른쪽 끝에 가서 역사학계를 친북좌파라라고 하는 격이다.9)

### Ⅲ. 교과서포럼의 역사인식과 서술의 문제점

#### 1. 내러티브 비판

교과서포럼은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역사와 정치의 역사정책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분리되기 어렵지만 이들의 역사정책은 지나치게 당파적이다. 한편으로는 '실용'을 강조하면서도 아직도 '좌경'세력이라는 적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우리를 편 가르기 하는 냉전시대의 이분법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에 의하면 우익 '실용'세력과 역사관을 달리하는 모든 역사해석은 적대적인 '좌경'세력의 것이 된다. 더 나아가 이제 우익이 정권을 잡았으니 '좌경적'인 내용들은 모두 청소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당파적 입장의 강조인가?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사람들이 역사를 다루는 세 가지 태도를 구별한 바 있다. 첫째, 옛것은 무조건 소중하다는 관점에서 역사를 골동품처럼 다루는 태도와 둘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태도 그리고 셋째, 현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역사란 과거의 성취와 영광만을 기록하는 기념비라고 보는 태도가 그것이다. 이 중 마지막이 수구적 태도의 전형이며, 세 가지 중 가장 저급하고 문제가 많은 태도이다. 현재적이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한국사를 문호개방기부터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를 일련의 성공적인 근대화 과정으로 보는 정부와 뉴라이트 세력의 태도가 바로 이 것이다. 이들에게는 일제 식민지 시대와 남북 분단 그리고 군부 독재가 드리운 우리 현대사의 암영은 단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 착취당하고, 인권 유린에 시달린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과 절규는 무시해도 좋을 것들이며 민중은 결코 우리 현대사의 주연이 아니다. 반면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역사에서 일본제국주의와 미국, 그리고 친미친일적 독재 정권이 역사의 주연이 된다.

이 책의 머리말을 보면, "역사가의 주관적 개입을 피하고" "실증 정신"에 입각하여 서술되었다고 한다(5쪽). 그러나 사실관계의 무수한 오류, 노골적인 당파성 즉 친일, 친미적, 친독재정권적, 역사행위자들의 범주를 톡 하면 "좌우파"로 분류하는 냉전적 태도 등으로 볼 때 과연 이들이 말하는 "실증 정신"이 무엇인가?

한편 이들은 '우리 민족' 대신에 '한국인' 즉 보통사람들을 역사적 행위의 주체로 설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매우 특이하게도 일반적 언어적 관행과는 달리 '우리 민족'과 '한국인'('보통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대립 개념

9) 김중철, "투사로 변한 원로학자" 「한겨레신문」, 2006. 5. 1: 강준만, "내부비판과 '성찰'에 충실하자" 「한국일보」 2006. 5. 3: 이광일, "안병직 교수와 김영환씨" 「한국일보」, 2006. 5. 6

으로 쓰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기존의 '우리 민족'과 다른 '한국인' 또는 '보통 사람들'을 구별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진술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한국인' 또는 '보통 사람들'의 개념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책의 본문에는 보통사람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상사적인 시각이 담긴 서술도 전무하다. 오히려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적 행위의 주체는 국내적으로 정치가, 기업인, 지식인, 정당 및 사회단체, 국외적으로 일본 미국 등으로서 그 어디에도 보통사람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보통사람들은 결코 주체로서 파악되지 않는다.

이들이 말하는 탈민족주의적 문명사관의 기저에는 근대화론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태어나는 역사적 과정에 특별한 애정을 쏟았다. 그것은 이 국가가 인간의 삶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기에 적합한 지금까지 알려진 한 가장 적합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6쪽) 라는 서술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식 자본주의와 정치체제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역사발전의 단계이다. 마치 냉전 시대 사회주의 블록이 자신의 체제를 가장 발전한 단계로 묘사하듯이 말이다. 목적론적이고 냉전적 역사관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탈근대적 근대화론이 이 교과서가 취하는 사관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해 탈근대주의의 옷을 입은 친미적 근대화론인 것이다. 이로 인해 이 교과서는 최소한 세 가지 점에서 탈근대주의를 오용하고 있다. 첫째, 노골적인 국가주의와 냉전적 태도는 탈근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 삶의 다양성의 강조와 정면으로 모순된다. 둘째, 근대화론이 취하는 목적론적이고 결정론적 시각은 '대문자 역사'와 '인류역사를 세계사의 장엄한 진보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거대 서사'를 거부하는 탈근대주의 사관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셋째, 주지하다시피 근대화론이란 서유럽의 특수한 경험을 보편화시킨 서구 중심주의, 궁극적으로는 미국 사회의 특수한 가치와 제도를 보편화시킨 미국중심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잘 알려져 있다. 탈근대주의는 바로 이러한 비판과 맥이 통하는 사상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탈근대주의적 근대화론이 근대화론에 강조점이 찍혀지는 동시에 이들의 근대화론은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의 '문명화' 이념에 더욱 근접하고 있다. 예를 들어, 137쪽의 "38도선의 획정 경위와 역사적 의의"라는 박스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38도선은 단순히 한반도의 분단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자유, 인권, 시장 등 인류보편의 가치가 미국군을 따라 한반도에 상륙한 북방한계를 나타내는 선이었던 것이다." 또한 6쪽의 "이 국가(대한민국)가 인간의 삶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기에 적합한 지금까지 알려진 한 가장 적합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과 뒤를 이어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일본이 초석을 닦고 미국이 도와준 근대화 덕택에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 문명권에 포함되었으니 이제 암흑과 야만의 세계인 북한을 문명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읽을 수 있다. 서구 제국주의자의 시각을 그대로 전유한 것으로서 이러한 생각을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라 했다. 이 교과서는 이와 같은 오리엔탈리즘이 강하게 담겨있다.

#### 2. 식민사관 부활 프로젝트: 한국 근대 초기 서술

교과서포럼 명의로 작성된 「역사비평의 대안교과서 비평에 대한 반박」에는 발표자의 비판에 대해서 장문의 반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역사비평에 실린 세 역사학자는 '개인'의 실명으로 글을 작성하였는데 반해 이들은 교과서포럼이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반박문을 작성하여 책임의 소재를 밝히지 않

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세 명의 학자는 개별 필자들로서 글을 쓴 것이 『역사비평』의 요구대로 쓴 것이 아니다.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사실의 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교정수준의 비평”이라던가 “실증 문제를 둘러싼 지엽적인 문제”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자신들도 역사학자라고 강변하면서, 그것도 교과서를 표방한 책에 그렇게도 무수한 오류가 나타난 것이 지엽적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역사학자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특히 자신들이 범한 오류를 『민족문화백과대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으로 변명하는 것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적어도 전문 역사학자가 제대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백과사전 보고 교과서를 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1) 사실관계의 오류들

### (1) 개항

통신사를 “일본의 국왕이 교체될 때마다 간 것”이라고 했는데, 일본 국왕이라면 ‘천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통신사는 ‘천황’이 아니라 막부의 쇼군(將軍)이 교체될 때 갔던 사신이다. 물론 당시 조선에서는 쇼군을 일본의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이 아무 설명 없이 일본의 국왕이라고 하면 ‘천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10)</sup> 더욱이 당시 왜관이 동래에 있었다고 하였으나, 1678년 이후에는 초량에 설치되어 개항 이후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7~19세기를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서술이다.<sup>11)</sup>

### (2) 한국 사회의 대응과 동요

‘민왕후’라는 명칭은 어디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신조어이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명성황후’라는 명칭은 대한제국 이후에 붙여진 것이므로 그녀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맞지 않는다. 하지만 ‘명성’이란 시호는 그녀의 사후인 대한제국 시기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명성황후’라는 표현은 결코 그녀를 지나치게 높이는 표현이 아니라 당연한 호칭이다. 일반적으로 역사 서술에서는 죽은 뒤에 붙여진 시호를 생전에도 사용한다. 오히려 성을 붙여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는 의도적으로 칭호를 격하시켰던 일본 식민사학자들에게 동조하는 결과가 된다.

더욱이 명성황후가 “척족 민씨의 집권에 증추로서 역할을 하였다. 임오군란 후 잠시 실권하였다가 청의 지원으로 재집권하였다”(34쪽)는 서술도 성립할 수 없다. 황후는 그 자체가 독립적 권력일 수 없다. 국왕과의 사적인 관계로 인해 권력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기에 재집권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녀를 시해한 것은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은 자객’이라고만 볼 수 없다. 거기에는 일본 군인을 포함하여 대원군이 동원한 한국 군대와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 거류민들이 가담하였다. 이는 일본군의 가담과 조선인 친일 세력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대원군의 참여를 호도하는 것이다.

“김옥균이 차관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민왕후 세력과 뮐렌도르프의 방해 때문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10) 이들이 일본의 쇼군이 대외적으로는 일본 국왕을 자임했으므로 ‘국왕’이라는 표현이 당시의 양국관계를 사실 그대로 서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293쪽) 아무런 보충설명 없이 그저 서술되었을 때 어떻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11) 이들은 동래가 초량의 상위 행정단위로서 초량은 동래부 부산진의 한 촌락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분명히 당시 기록에는 초량왜관이라고 되어 있다.

귀국하였다”(40쪽)는 것도 오류이다. 당시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외무 대신은 일본이 그런 거금을 차관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를 통해 조선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중심이 되어 다이이치(第一)은행의 시부자와 에이이치(澁澤榮一)를 통해 17만 엔을 제공하였으나 김옥균은 이 돈을 정부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주도하는 사업에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정부에 차관이 전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차관 교섭의 실패 원인에 대한 서술은 물론 빈손으로 귀국했다는 것도 잘못된 설명이다.

그리고 갑신정변 실패로 망명한 후 일본 정부가 김옥균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여겨 유배하였다(40쪽)고 하였으나, 처음 그를 오가사하라 섬으로 보낸 것은 김옥균이 ‘오사카(大阪)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본 대외 강경파들의 조선 침공 작전에 가담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조선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 밀사들이 파견되어 오는 것에 대한 조치이기도 했다.

### (3) 전통 경제의 구조 변동

그들이 경제사학자인 만큼, 이 부분은 역사인식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많지만 오류를 지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도 설명에서 조일통상조약이 1886년에 체결되었다고 한 것과, 조청상민수륙장정이 종주국과 속방 사이에 맺은 협정으로서 조약이 아니라고 스스로 설명해놓았으면서 조청통상조약이라고 한 점은 오류이며 1882년에 서울이 개항되었다고 한 점도 잘못이다. 내륙의 도시를 시장 개방한 경우에는 ‘개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개시(開市)’라고 해야 맞다.<sup>12)</sup> 이때도 양화진을 개시한 것이지 서울을 개항한 것은 아니었다(48쪽).

### (4) 근대 국가의 모색

삼국간섭으로 친러파가 정권을 잡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다. 여전히 김윤식, 어윤중, 유길준 등이 내각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친러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이 사건과 을미사변에서 대원군이 했던 역할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고의로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관파천 후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면서 김홍집이 고종을 알현하기 위하여 궁에 머물다가 살해되었다고 한 것도 오류이다. 김홍집, 어윤중, 정병하가 고종의 지시를 받은 경무청의 순검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되었다고 하였으나 고종의 지시를 받았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어윤중의 경우에는 지방으로 피신하던 중 용인 부근에서 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민간인에게 살해된 것이었다.

또한 고종은 아관파천 후 단발령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편할 대로 알아서 하도록(從便爲之) 조칙을 내렸을 뿐이다. 독립협회가 국왕의 환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말이다.<sup>13)</sup> 또한 독립문의 완공일은 알 수 없는데 무슨 근거로 1897년 11월 20일에 완공되었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서재필이 추방된 것이 아니라 중추원 고문에서 해직된 후 남은 기간의 월급을 받아서 스스로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여전히 미국 추방설을 제기하고 있으며,<sup>14)</sup> 그가 미국 시민이 되어 이름을 바꾼 것을 단지

12) 이들은 자신들이 개항이 아닌 개방이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분명히 그 페이지의 지도 부분에는 서울 개항이라고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바란다.

13) 그들은 독립협회가 환궁을 요구했음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라고 변명한다. (294) 그렇다면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미국명이라고 하는 것도 오류이다. 서재필은 개화파가 정권을 잡자 귀국한 것이 아니라, 외무협관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아 면직된 뒤 뒤늦게 1895년 12월 25일에 귀국했다. 윤치호는 독립협회가 창립될 때 러시아에 특사로 파견되어 국내에 없었으므로 서재필, 이상재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했다고 한 것은 오류이며, 당시 이상재가 독립협회를 창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반면 회장이었던 안경수와 위원장으로서 또는 2대 회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완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만민공동회에는 의장이라는 직위가 없었으며 회장은 고영근이었다.

“서재필이 추방된 후 윤치호가 회장이 되어 1898년 3월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60쪽)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서재필이 출국한 것은 5월로서, 3월에 있었던 만민공동회 계획에는 서재필도 참여하였다. 만민공동회 개최 당시의 독립협회 회장은 이완용이었고, 이완용이 전라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이탈한 이후에야 부회장 윤치호가 회장 대리로서 독립협회를 이끌었다. 그가 정식으로 회장이 된 것은 8월 28일의 일이다.

“의회 설립 운동은 1898년 12월 정부가 동원한 보부상 단체의 공격을 받아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60쪽)는 것도 오류이다. ‘의회 설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던 것은 관민공동회였으며 이것은 10월 말의 일이었다. 보부상이 독립협회 지도자 체포에 항의하여 집회를 하고 있던 만민공동회를 습격한 것은 11월 21일이므로 12월에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이승만이 내각제 정부를 수립하고 고종의 양위를 꾀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그는 의회의 성격과 비슷했던 중추원에서 박영효를 대신으로 추천하고 실제로 반란을 모의하던 박영효 세력에 가담했기 때문에 체포되었다.

### (5) 대한제국의 위기와 망국

가쓰라-태프트밀약에 대해서 ‘협정’이라고 했다가 그 옆의 박스 설명에서 ‘협약’이라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오류는 일본이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서술(65쪽)이다. 그러한 내용은 이 밀약에 들어있지도 않았으며, 일본은 이미 미국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필리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sup>15)</sup> 이때 밀약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정부 간의 공식적 협정이 아니라 대화를 나눈 것을 문서로 작성해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을사조약’이라는 제목으로 조약문을 싣고 있는데, 이 조약의 명칭은 본문 설명에 있듯이 ‘제2차 한일협약’이다. 따라서 제목을 단다면 굳이 1905년의 간지인 을사조약이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현행 교과서도 ‘을사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문에서 편의상 설명하는 것과 조문의 제목을 다는 경우는 다르다.

이준이 1895년에 독립협회에 가담했다고 설명하였으나 독립협회가 창립된 것은 1896년이고, 그가 독립협회에 참여했다는 근거 또한 없다.<sup>16)</sup> 이준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만민공동회에 참여했다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자료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이미 오래 전에 필자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최익현에 대한

14) 서재필의 추방을 역시 민족문화백과대사전으로부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 주기 바란다. 이미 이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된지 10년도 훨씬 넘었다.

15)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도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보아도 그것은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필자의 주장은 이 밀약을 연구한 미국의 연구성과를 통해 확인된다.

16) 이들은 신용하의 연구에 나와 있다고 하나 그 부분의 오류에 대해 지적한 논문이 오래 전에 나와 있으니 우기지 말고 참고하기 바란다.

설명에서도 “1868년 대원군의 실정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려 파직되었다”(68쪽)고 하였으나, 그가 상소를 올린 것은 1863년이고 그를 쓰시마에 끌고 간 것은 일본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유배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문이다.

‘영선사’란 칭에 보내는 유학생을 인솔해서 가는 사신을 의미하였다. 그러니까 “영선사를 보내어 무기 화약의 제조법을 배우게 했다”(70쪽)는 서술은 잘못이다. 알렌은 “광혜원의 의사와 교수”라고 하였으나 광혜원이라는 명칭은 설립 계획상에만 존재했던 것으로서 실제로 병원이 설립되었을 때는 제중원이었다. 아울러 광혜원을 개원한 것이 ‘알렌의 선교 사업의 일환’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은, 병원 설립이 조선 정부의 근대 개혁 의지와 결합되었던 것임을 무시하는 서술로 보인다. 또한 언더우드도 “1885년 아펜젤러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되어”(73쪽)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보면 아펜젤러도 북장로교 선교사라는 식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 ‘기독교의 전파’라고 해놓고 천주교의 선교 자유부터 설명하고 있는 점도 문제인데, 그 아래에 있는 서술을 보면 개신교를 기독교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안중근에 대한 설명을 보면 “하얼빈 역에서 이토를 대한 황제 폐하를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맺고 황제 폐하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를 물어 권총으로 사살하였다”(76쪽)고 하는데, 이는 도무지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교과서를 표방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오류로서, 러일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여 주는 지도에서 제주도와 일본의 위치를 실제와 다르게 그린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순종을 ‘둘째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왕자가 있었지만 일찍 죽었기 때문에 순종이 적장자이다. 그러므로 굳이 둘째아들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미 1875년에 왕세자 책봉은 되어 있었고, 대한제국의 수립으로 황태자가 된 것임에도, 굳이 1897년에 황태자로 책봉되었다는 것만 서술하고 있다.

### 2) 식민사관으로의 복귀

#### (1) 조선 사회 정체성론의 회귀, 소농사회론

이 책은 소농사회론에 입각하여 17~19세기 조선의 전통 사회를 조명하고 있다. 즉, “대다수 농민은 소농으로서, 그들은 농업 생산과 사회생활의 기초 단위를 이루고 있었으며, 사회는 양반과 상민으로 구성되었는데, 17세기까지 4할에 달하던 노비가 19세기에 들어서서는 1할로 줄어들어 스스로 전근대적 신분제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있었다”(18~19쪽)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현행 교과서에서 상정하고 있었던 내재적 발전론을 부정하는 맥락에서 서술된다. 물론 내재적 발전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없지 않으며, 특히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를 지나치게 근대적 양상으로 그려냈다는 비판이 역사학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소농사회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다. 그런데 이영훈은 이 책에서 그러한 연구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소농의 개념을 제기하지는 못했다. 소농에는 자작농도 있고 소작농도 있는데, 이런 점을 무시하고 일괄해서 규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조선왕조 말기에서 일제시대에 걸쳐 한국 농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율 소작료에 신음하는 소작 빈농들의 극도의 빈곤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면서 신분제의 이완만을 강조하면, 당시의 대다수 소작 빈농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선 후기 사회를 소농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발전론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자신을 비롯한 극히 일부 경제사학자들만이 동의하

는 내용을 '대안'이라고 가르치겠다는 것은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은 농촌 근대화의 내용을 토지 사유권의 확립과 시장 경제화라고 보는 입장에서,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덕택으로 농촌이 근대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일제하에 한국 소작 빈농들이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했던 점과 해방 후의 농지개혁에 의해 비로소 자립적 소농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 근대화에 대한 일제의 공헌을 과장하는 이들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언뜻 보면 이 책은 조선 사회를 상당히 의미 있는 시대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17~19세기 전통 사회는 그 시대를 빼놓고는 오늘날 한국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역사적 유산을 남겼다", "공동체가 큰 역할을 수행한 여타 후진 사회보다 높은 수준의 문명에 속한다", "소농 사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전근대적인 신분제의 굴레로부터 해방되고 있었다", 소농 사회의 "문명 요소는 이후 한반도에 서양의 근대 문명이 들어올 때 그것의 순조로운 이식을 가능케 한 내재적 토양을 제공하였다"(이상 18~19쪽)는 등의 서술이 그렇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농사회론'에 내재되어 있는 '조선 사회 정체성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서술은 구체성을 지니지 못하고 추상적으로만 언급되어 도대체 무엇이 그런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역사학자인 필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설명을 학생들에게 대안이라고 제시할 수는 없다. 사실 "소농 사회가 서양 근대 문명의 순조로운 이식을 가능케 한 토양"이라는 서술에 이영훈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제시된 사진 자료의 경우, 17~19세기 장시의 발달을 언급하면서 20세기 초에 찍은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20쪽). 그리고 조선왕조가 엄청난 수탈 국가라는 점을 장황하게 언급한 후 난데없이 "조선왕조가 백성을 수탈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여 혼란을 주면서 환곡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 운영에 관한 언급은 없이 "조선왕조의 경제 정책은 백성의 살림살이를 평안하게 함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고 있다(21~22쪽).

## (2) 타율성론으로의 회귀, 중화제국론

과거 일제의 식민사학자들은 조선이 늘 중국의 지배를 받던 속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을 속국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었으며, 일본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받는 조선의 모습은 한국 역사에 늘 있어왔던 외세에 의한 지배의 연장선상에서 합리화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후소샤를 비롯한 일본 우익의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한국의 역사학계는 이에 맞서왔다.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중화제국'은 역사상 그 실체가 있었다기보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으로만 존재하는 제국이었다. 중화란 그야말로 문화적 개념이며 제국은 정치적 개념인데, 이들은 양자를 혼동하고 있다. 조선인들에게 청은 사대외교의 대상이었으나 중화라고 인식되지는 않았으므로 중화제국론이란 그야말로 상상의 산물이다.

더욱이 이 책은 자주와 독립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조선왕조가 중화제국의 조공국의 층위에서 독립 국가로 자존하였다"(23쪽)거나 "조선왕조는 중화제국과의 사대 관계 안에서 자주 독립을 누렸다"(25쪽)고 한 것이 그것이다. 조선왕조는 병자호란 이후 청의 속방 위치에 있었으므로 독립된 국가라고 할 수 없었으며,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청이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승인할 때까지 자주국이라는 하나 독립국은 아니었다. 반면에 내정 외교 면에서는 자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였다. 그러므로 자주와 독립은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조선은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구미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는 바로 조선이 국제적으로

독립국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과의 관계에서는 독립국이 아니면서 다른 열강과의 관계에서는 독립국으로 인정되는 양절(兩截) 체제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열강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여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이탈시키려고 한 것은 조선에 대한 자유 행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열강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를 확고한 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청으로부터의 독립이 요청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중화제국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시 조선에 대한 청의 규정력을 과대포장하고 그것을 해체시킨 것이 일본이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는 고종의 황제 즉위에 대하여 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개화파의 노력이나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려는 고종의 의도보다도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배했다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서술(56~57쪽)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일본이 독립시켜주었으나 결국 스스로의 자강개혁에 실패함으로써 식민지로 다시 전락하고 말았다는 서술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타율성론의 회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 후소샤 교과서의 한국관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 (3) 일본 교과서를 방불케 하는 서술

이들은 나아가서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이 책이 일본 교과서인지, 한국 교과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서술을 하고 있다. 청일전쟁에 대한 서술 어디에서도 일본군이 왜 조선 내부의 문제였던 동학 농민 운동에 군대를 파병하여 내정 개혁을 강요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부 일본 교과서들이 "일청 양국이 출병하였을 때 이미 농민군과 조선 정부는 휴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군대를 주재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조선 정부에 강요하고 그에 대한 회답에 불만하여 조선의 왕궁을 점령하였다"고 한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술이다.

방곡령에 대한 설명에서도 "조선왕조는 흥년을 명분으로 방곡령을 발동하여 일본 상인에게 타격을 주었다"(45쪽)고 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에 친일 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일본 혼성여단이 서울에 진군, 만리창과 아현동에 주둔하였다"(46쪽)는 서술도 그렇다. 한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는 일본군의 서울 침략이지 '진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sup>17)</sup>

면직업에 대해 "서울을 중심으로 잠시 성립했지만 이것도 러일전쟁 이후 쇠퇴하였다"는 설명은 면직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일본이 저지했다는 측면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다(50쪽). 그리고 철도회사 및 은행의 경우에도 그 한계만을 지적하고 있는데, 아직 초창기로서 충분히 역량을 결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민지화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말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인의 입장에서만 평가하고 있다.

또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원인을 "삼국간섭으로 친러파가 정권을 잡는 사태가 벌어지자"(55쪽)라고 하여 사실을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인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에 앞서서 중앙 정계에서 밀려난 개화파가 일본군의 지원에 의해 다시 집권하였는데 "정권 탈취를 주도한 인물은 유길준 등의 소장 관료"(53쪽)라고 하여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본군의 경복궁 침략을 정권 탈취라고 보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러일전쟁의 배경 설명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야심'이라고 하는 반면 일본은 '진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17) 이에 대해서 '단어 하나를 두고 상대방을 사문난적으로 모는 교묘한 버릇으로부터 국사학계는 하루빨리 해방되어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대단히 과잉반응이며 도무지 자기반성이 없는 합리화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자기 나라를 침략한 외세의 군대가 진군했다고 쓰는 교과서가 과연 있다는 말인가?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같이 '침략'을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후소샤 교과서를 통해 역사인식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대표적 사례로서 이미 양심적 일본 역사학계가 치열하게 반론을 제기했던 서술 방식이다.<sup>18)</sup> 또한 '일본의 승전'이라는 제목 하에 "일본은 대한제국이 친러 정책을 취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선이라고 간주했던 한반도에 대해 러시아가 야심을 드러내자,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64쪽)라고 하여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설명 역시 일본 교과서<sup>19)</sup>를 방불케 한다. 그가 조선 침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일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과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두자는 입장에 서서 양국의 병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만 언급하여, 마치 그가 조선에 대해서는 침략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66쪽). 이와 같이 일본 정치계의 움직임과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고 온건파의 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암살함으로써 강경파가 식민지화를 강행하게 되었다고 서술한 것은 일본 교과서와 동일한 설명이다. 이들이 온건파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시기상조론이었다. '온건파'라는 호칭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식민지화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의로 은폐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병합의 방침을 공식 결정한 것은 1909년 4월"(76쪽)이라고 서술하였는데, 이토가 통감을 사임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헤이그 밀사 사건에 대해서도 "열강의 간섭을 기대한 고종의 노력은 일본을 강경책으로 선회하도록 자극하였다"(68쪽)고 하여 식민지화를 고종이 자초한 것처럼 서술하는 한편 일본의 정책 변화를 정당화했다.

이밖에도 일본에 대한 서술은 아니지만 제너럴셔먼호 사건에 대한 서술의 관점에도 문제가 있다. "통상을 요구하다가 주민의 공격을 받아 불타버린 사건"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평화적 요구에 대해 조선 주민들이 폭력적으로 공격한 사건인 것처럼 오해하게 한다(32쪽). 당시 평양 관민들은 물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평화적인 교섭을 통해 돌아갈 것을 요청했으나 제너럴셔먼호가 조선 관리를 억류하고 무력 도발을 함에 따라 화공을 가한 것이었다.

### 3) 한국 근대 변혁 운동에 대한 편향적 인식

#### (1) 개화파에 대한 일방적 미화

줄기차게 반복되는 고종과 명성황후에 대한 부정적 언급, '동학 농민 운동'을 보수적 근왕주의로 보는 의도적 왜곡 그리고 의병 운동에 대해 한 쪽도 되지 않는 소략한 서술 등에서 이들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바로 개화파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그들의 실패로 인해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숙명론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문제점과 갑신정변으로 인해 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손실되고 청의 외압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지적한 학계의 연구에 대하여, "오늘날 한국의 일부 역사학자는 갑신정변을 일본에 의존하여 경거망동하여 근대화에 필요한 인적 역량만 잃어버렸으며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의 위기만 부추겼다고 낮게 평가하고 있다. (...) 갑신정변을 저평가하면서 그 주역들에게 식민지화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1880년대 당시 한국을 반식민지 처지로 내몬 것이 일본이 아니라 청이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문제

18) 이에 대해서 '깊은 악의에 두려움마저 느낀다'는데 이는 악의가 아니라 일본 역사학계가 진출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한 논란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바란다.

19)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후소샤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표자의 오류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일본의 大阪書籍에서 나온 교과서에 실려 있다.

점을 안고 있다"(40쪽)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게 되는 것이다.

역사학자 가운데 갑신정변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필자도 갑신정변이 식민지화의 위기만 부추겼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당시 정치 세력 가운데 가장 선진적 입장에서 서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진행과정 및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균형 있게 서술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 책은 "정변이 실패한 후 10년간 조선왕조가 청의 강한 간섭과 통제 하에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왜 그토록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갈망하면서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40쪽)고 서술했는데, 이는 1884년부터 1894년 사이에 고종 친정 체제가 청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국으로 인정받고자 미국과 유럽에 외교 사절을 파견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제증원과 같은 근대적 의료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육영공원, 연무공원, 외국어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는 점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갑신정변의 실패 원인은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급진적 개혁 정책에 호응할 사회 세력의 미성숙이 근본 원인"(41쪽)이라고 함으로써, 정변 주도 세력의 정세 판단 과오와 미숙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갑오경장'의 실패 원인을 설명하면서도 "국왕의 지지도 사회 세력의 뒷받침도 없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55쪽)고 하여 개화파 세력 자체의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한편 '민란의 물결'이라고 해놓고 대부분 1840년대를 제시하고 있어, 백성들의 저항이 고종과 '민왕후' 세력에 대한 것이었다고 오해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개화파를 미화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들과 비슷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 보수 세력을 자처하는 자신들의 역사적 기원을 개화파에서 찾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그 노력이 좌절됨으로써 근대 국민 국가 수립에 실패하고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 (2) 집권 세력에 대한 악의적 비판

이 책은 대한제국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대한국 국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고종의 개혁 군주로서의 성격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이 시도하고 있는 대한제국에 대한 부정 일변도의 평가는 더욱 문제다. 이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사(前史)로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은 그런 생각으로 이용익의 탈 일본 노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을사조약 후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프랑스로 향하던 중 일본 관헌에 발각되었다. 해외에서 유랑하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망하였다"(62쪽)고만 서술하였다.

물론 이용익에게 대한제국 경제 정책의 집행자로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을사조약에 반대하다가 일본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 군부대신, 관찰사를 마다하고 그가 프랑스로 갔던 이유는 러시아와 프랑스를 통해 국권을 회복해보려는 노력이었다. 비록 그이 노력이 실패하였고 살해 미수사건까지 겪으면서 다시 상하이까지 돌아 왔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거처를 옮겼으며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1907년 2월 사망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를 유랑하다가 죽었다고만 하는 것은 지나친 서술이 아닐까?

한편 대한제국의 역사적 평가를 1970년대 광무개혁 논쟁으로 끌고 올라가, 광무개혁론이 고종과 '민왕후' 세력을 근대화의 주역으로, 대한제국은 일본과 유사한 근대 국가로 평가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주장이다. 광무개혁론이 고종을 근대화의 주역으로 평가했거나 대한제국이 근대국가로 성립되었다고 한 것도 아니다.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일본의 압력은 물론 고종의 한계, 개화파 관료들의 동요에 의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대한제국에 대한 이 책의 서술을 보자. "전체적으로 통치자에게 강한 개혁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까지는 몰라도, "궁중에 출입한 무수한 하인배의 급료로 낭비되었다"(63쪽)는 식의 서술은 도무지 상식적인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일제가 외교권의 이양을 요구할 때 그것을 견제할 의회 권력이 존재하지 않아서 약점을 노출하였다는 것도, 국권 침탈의 책임을 일본의 강요가 아니라 고종에게 돌리려는 의도이다. 만약 의회 권력이 존재했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있지도 않은 의회 권력을 상정하는 무리한 가설이다.

### (3) 민중의 저항 운동에 대한 무시

먼저 이들은 동학 농민 운동을 '동학 농민 봉기'라고 의도적으로 격하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서술이 "기존 체제를 부정한 급진적 혁명이었다기보다는 유교적 근왕주의에 입각하여 서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던 복고적 개혁의 성격이 강하였다"(45쪽)는 표현이다. 사실 이 부분은 감수를 받은 유영익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농민군은 유교적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을 벌였다. 그들이 변혁의 대상으로 설정했던 것이 국왕과 척족 세력들이었다.

역사학계에는 일반적으로 당시 농민군 지도부가 현실 사회를 부정했으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체계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농민 혁명'이라기보다 '농민 전쟁'이었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교과서가 이 부분에 대해 '동학농민전쟁'이나 '동학농민혁명'이라 하지 않고 '농민 운동'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을 이행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동학 농민 운동을 복고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당시 '복고'의 의미가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부정하고 있는 오지영의 『동학사』에 대해서도, 그 저술의 배경과 성격 및 내용 등에 대해서 이미 역사학계는 어느 정도 비판적 검토를 통해 오류들을 지적해왔다. 특히 '폐정개혁안 12개조'는 아직 팽팽하게 진위 여부를 논쟁하고 있는 문제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12개조와 같은 명시된 폐정개혁정강은 없었다고 생각되나, 오지영이 익산의 집강소에 참여했던 것은 확실하며, 당시 집강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직 학계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 관하여, 어느 한 학자의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서술할 수는 없다. 농민전쟁론 또는 농민혁명론의 근거가 모두 『동학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이 책의 주장도 억지인데, 다른 사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농민전쟁론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집강소'의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점도 농민 전쟁의 의미를 훼손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인다.

또한 의병 전쟁에 대한 설명은 불과 11줄에 불과하며, 그나마 "무기나 기율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전투보다는 상소나 시위를 위한 집단에 가까웠다"(68쪽)고 하여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였다.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는 1페이지 정도 서술하였으나, 이것 역시 기존의 교과서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한 분량이다. '해외 이민과 독립

운동'이라는 소제목 붙여놓고 맨 마지막 한 줄만 독립 운동가들의 망명과 해외지기로서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 3. 식민지시기의 서술: 식민지근대화론으로의 매몰

### 1) 식민지근대화론과 친일옹호론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 근현대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특히 식민지시기에 대한 서술은 그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이 책은 식민지시기 일제의 지배가 억압적이었다고 말하지만 지배정책의 억압성에 대한 서술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신 이 책은 식민지시기 새로운 근대 문명에 관한 학습기, 근대문명의 제도적 확립기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식민지시기 경제에 대해 '수탈' 대신 합법적인 경제운영이 이루어진 시기이며, 상당한 '경제성장'이 있었던 시기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식민지시기에 철도, 도로, 항만 등이 많이 건설되었고, 교육과 위생·의료부문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겉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아예 식민지근대화론이란 ("식민지시기에) 오늘날 한국 현대 문명의 제도적 기초가 그 과정에서 닦였음을 강조하는"(96쪽) 시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들이 식민지시기를 문명의 제도적 기초 확립 시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1910년을 전후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본은 '문명의 사도'로서 조선에 왔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식민지시기에 근대 문명이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제도화된 시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식민지시기가 '문명의 제도화' 정도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식민지시기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한국이 일본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역사서술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은 어떠한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문명의 제도화'는 어디까지나 식민지배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적인 내용이지 그것이 식민지시기 역사 서술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책의 식민지시기 역사 서술의 중심은 식민지시기의 '문명의 제도화', 곧 식민지 근대화에 두어져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책의 식민지시기에 대한 서술이 '식민지근대화론'에 매몰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이들은 일제의 한국 지배가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한 폭력적 억압체제"에 입각해 있었고 "국내외의 한국인들의 불굴의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78쪽)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자신들의 '대안 교과서'를 한국의 역사 교과서로 인정받기 위한 상투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서술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대단히 소략하거나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포럼 관계자들은 현행 검정정국사교과서가 지나치게 민족주의 관점에서 서 있어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편견에 입각해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맹비난한다. 그 결과 민족 감정에 치우쳐 일제 식민지 시기 항일운동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항일운동은 과장되었다기보다 실제 사실보다 훨씬 덜 밝혀져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미화할 필요가 없이 '민족적 편견에서 벗어나 사실 그대로' 서술하자면 악질 친일파들이 일제에 빌붙어 항일운동을 악랄하게 탄압한 사실과 해방 이후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어떻게 기득권을 계속 이어왔는지 마땅히 서술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항

일운동을 탄압한 악랄한 행위에 가담한 자들의 죄행에 대해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을 은폐 또는 미화하고 있다. 사실 항일운동사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며, 항일운동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 '대안교과서'의 항일운동사 관련 서술을 보면 사실들을 이리 저리 나열하고 있으나, 기초적인 사실 오류는 물론 서술 방식이나 서술 체계 그리고 각각의 항일운동의 성격과 의의에 대한 평가 등은 차마 '교과서의 대안'이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또한 이들은 현행 교과서는 일제가 식민지 민중에 대해 억압과 수탈을 자행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이것 역시 민족적 편견에 입각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가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으며, 이 시기 한국인들은 일제의 식민통치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와 한국인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을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라고 새롭게 규정한다. 본문 또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매우 많은 비중을 두고 서술하고 있다.

예컨대 '대안교과서'의 필자들은 일제가 민사령(民事令)을 통해 개인의 인격적 존엄과 자유로운 행위,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활동을 조선인에게도 전면적으로 보장했다고 주장한다. 일제 식민통치 당국의 공권력에 기초한 폭력적 수탈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순수하게 자본주의 경제교환관계, 즉 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교환을 통해 부의 이동이 있었을 뿐이라고 역설한다. 일제는 식민지에 막대한 투자(개발 또는 근대화)를 했지만 식민통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제는 이익 대신 손해를 보았다는 놀라운 의견을 내놓았다.<sup>20)</sup>

한편 조선인들은 이러한 일제의 근대화 시책에 힘입어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일제의 정책에 잘 적응한 까닭에 근대화 역량을 축적하여 훗날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적 기초를 이 시기에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식민지시기를 대한민국이라는 우량아가 일제 식민지라는 뱃속에서 영양 공급을 잘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던 '대한민국의 임신기간'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결국 '대안교과서'는 일제의 민족 차별과 폭력적 억압의 실상 대신 일제 식민통치의 근대적 효과와 그 성과에 주목하면서 사실상 '식민지근대화론'이나 '제국주의 시혜론'에 입각해 식민지시기를 서술하고 있다. 일제 식민통치마저 미화하는 마당에 일제의 하수인인 친일파에 대해서 이들을 비판적 시각으로 서술하기란 난망하며, 오히려 '대안교과서'는 친일파들을 일제의 식민통치와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 잘 적응해 근대적 능력을 배양하여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놓은 '근대화 선구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실제로 '대안교과서'는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해 친일행위를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쪽)의 조선인들의 실천 활동으로 해석할 길을 만들어 주고 있다. 특히 지식인·관료·자본가 계층의 친일 행위를 근대화 역량의 축적과 건국 후 대한민국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행위로 정당화하고 나아가 이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식으로 묘사한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식민지 시기 '항일은 독립쟁취, 친일은 건국 역량준비'라는 기괴한 도식이 성립한다. 서로 적대 개념인 항일과 친일이 둘 다 국가 건설을 위한 '애국활동'이 된다. 아니 사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근대화 경제성장=문화'라는 시각에서 역사 사실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항일보다는 친일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

20) 자신들의 '대안교과서'에는 차마 이렇게 까지 쓰지 못했지만,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핵심을 이루는 서울대 경제학과 안병직 제자들이 주축이 된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물론 '대안교과서'가 친일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하지 않지만 친일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최남선·이광수·홍난파 등의 친일 활동과 일제말기 이른바 '전시총동원체제' 각계각층의 조선인들의 전쟁 협력행위에 대해서도 제법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교과서'는 최남선을 소개하면서 "1927년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촉탁이 되었고, 1939년 만주국 건국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였다. 귀국 후 1943년 학도병 지원을 권유하는 강연 활동을 하였다. 해방 후 반민특위의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기도 한다. 홍난파 또한 수양동우회 사건 이후 "총독부의 정책에 동조"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광수에 대해서도 "그리하여 과거 민족주의 활동으로 이름 높던 많은 지도적 인사가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협력자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이광수(李光洙)는 한국인이 일본인이 되어 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길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에서 신문과 잡지에 글을 쓰고, 국방헌금과 학도출병을 권유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본문 옆에 이광수를 독자적으로 설명하는 박스 안에서 "1905년 일진회의 추천으로 일본으로 유학...1937년 동우회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반년 만에 병보석으로 출감, 이때부터 본격적인 친일 활동을 전개하여 1939년에 친일어용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이 되었다. 해방 후 반민특위의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서술했다.

전시총동원체제를 설명하면서 일제에 대한 조선인 지도자층과 일반 민중 그리고 각 분야의 일제에 대한 협력 행위를 다루고 있는데 현행 검인정 교과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들의 친일 행위를 서술한다고 해서 이 책이 친일문제를 역사적으로 제대로 해명하고 있는 별개의 문제다. 특정 인물의 친일 행적만 언급할 뿐 일제 강점기 전반에 걸쳐 친일문제를 구조적 또는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인들의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외면하거나 반대로 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친일문제 인식이 대단히 편향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시총동원체제 하의 조선인들의 각종 전쟁협력행위에 대한 기술도 자세히 살펴보면 친일파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일제 말 조선인 지도자나 민중 대다수가 일제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론에 입각해 '친일불가피론'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에 적극 협력하고 전쟁 동원에 앞장선 친일파들과 일제의 물자 수탈과 인력 수탈의 대상이 된 일반 조선인들 모두 일제의 침략 전쟁에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협력'했다는 식으로 서술해 과거 친일파들의 단골 변명인 '전민족 친일공범론'을 옹호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인 친일파와 피해자인 조선민중을 일제에 대해 모두 협력했다는 식으로 같이 묶어버려 사실상 친일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더구나 일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앞장선 이들을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친일미화론=친일파 건국기여론'마저 그 속에 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이들의 이른바 '건국절 제정'주장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 2) 식민지 지배 정책과 관련한 서술

### (1) 토지조사사업과 광무양전의 대비

먼저 지적할 것은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서술이다. 이는 대한제국기의 광무양전 사업에 관한 서술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광무양전 사업에 대한 서술에서 "전제국이 대한제국으로서는 일반 백성에게 일몰 일권의 근대적인 사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 '時主'라는 생소한 규정을 고안하여 토지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권은 황제에게 귀속함을 명확히 하였다"고 쓰고 있다(62쪽). 그리고 '시주'란 임시적 또는 한시적인 주인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박문」에서도 '時主'는 주인은 주인이되 本主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오래전부터 이영훈이 주장해오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교과서 포럼은 광무양안에 대한 서술에서는 조선사회에서 오랫동안 성장해온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대한제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반면에 토지조사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부분 소유권자가 신고한 대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고 서술하고 있다(84쪽).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대부분 신고한 이들이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평자도 인정하지만 조선시대에 오랫동안 성장해온 사적 소유권이 광무양전에 의해서는 부인되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서는 근대적인 소유권으로 인정받았다고 대비시켜서 서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광무양전 사업에서도 이미 ‘시주’라는 이름으로 현실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 깊이 관여한 와다 이치로(和田一郎)도 토지조사사업은 광무연간의 양전사업의 의도를 계승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양자 사이에는 단절이 아닌 연속의 의미가 더 컸던 것이다. 그럼에도 교과서포럼의 책은 이를 단절적으로 보려하고 있다. 평자는 이 책이 왜 대한제국 정부의 사업에 대해서는 폄하하면서 조선총독부의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2) 산미증식계획의 성격

다음으로 이 책은 산미증식계획과 관련하여 수리조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농민들의 수리조합 반대투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농민들은 토지조사사업보다는 수리조합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각지에서 수리조합 반대투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교과서 포럼은 산미증식계획 기간 중 쌀의 증산과 대일 수출 문제에 관해서 “1910년대 후반에 비해 1930년대 연평균 쌀 생산량은 700만석 가량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570만석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고 쓰고 있다(87쪽).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따른 박찬승 교수의 비판에 대하여 그들은 이러한 통계 제시에 대해 「반박문」은 1910년대 후반의 미곡 생산의 통계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산미증식계획 후 일본으로 쌀이 얼마나 실려 갔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교과서들이나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나 모두 증산량이 얼마이며, 그 가운데 얼마나 일본으로 ‘더’ 실려 나갔는가 하는 수출 증가분의 절대 액수를 가지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방식은 산미증식계획 이전에 실려 간 쌀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문제는 절대 생산량 가운데 수출량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겨진다.

## (3) 의료시설의 개선

이 책은 “총독부는 보건위생업무를 경찰소관으로 하여 식수와 음식 등 오염원을 관리하고 예방접종에 힘을 써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았다”고 쓰고 있다(95쪽). 이러한 서술도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염병과 관련한 사망자수는 콜레라의 유행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은 1919, 20년을 비롯한 1920-30년대에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늘어만 갔다. 이는 총독부의 전염병 대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의료개선으로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내용은 의료 시설의 개선문제를 총독부가 각 도에 세운 자혜의원(뒤에 도립병원)의 이용실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특기할 것은 조선인 외래 환자 수가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인 외래환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1930년 조선 내 인구가 조선인이 약 2천만, 일본인이 약 50만 명으로 일본인이 조선인 인구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1930년 일본인 환자수가 16만여 명인데 조선인 환자 수는 23만여 명이라는 것은 인구 비례로 볼 때 일본인 환자의

이용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그러면 일본인은 왜 조선인보다 병원 이용도가 높았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립병원의 사용료 및 수수료가 고가인 점과 도립병원의 직원 대부분이 일본인이라는 점이였다. 게다가 간호부도 일본인이 대다수이니 일본어를 모르는 조선인 환자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자혜병원은 일본인 중심의 병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도립병원의 의사수도 매우 부족해 1931년에 겨우 100명을 넘기 시작하여 1942년에도 200명을 넘지 못하였다. 한 도립병원에 의사가 겨우 3-6명 정도 있었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공중보건과 의료가 개선되었다고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 (4) 도시의 발전

이 책은 인구증가를 말하면서 “도시의 발전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95쪽). 하지만 식민지시기의 도시의 발전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 ‘일본인’ 인구의 증가이다. 이 책 전체에서 조선 사람이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많지만 일본인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들이 어디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일제 말기에 약 75만 명의 일본인이 조선에 들어와 살고 있었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도시에 모여 살았으므로 도시의 발전은 일본인들의 조선 이민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물론 식민지시기 도시화의 진전이 일본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시기 도시의 발전을 언급할 때, 주요 도시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주도되는 ‘식민도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경성부 일본인 인구는 1920년 6만 5천여 명에서 1940년 15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1935년 조선인은 경성부 인구의 70.7%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성부 전체 토지의 45.7%밖에 소유하지 못했고, 납세액에서도 24.4%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반면에 일본인은 경성부 인구의 27.9%를 차지했는데 토지는 52.9%를 소유하였으며, 납세액은 6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서울과 같이 일본인이 다수 들어와 살던 도시의 경우 토지 소유도 대부분 일본인의 것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납세액에서도 일본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서울이나 개항장에서 발전한 도시들은 그 구조에서 일본인촌과 조선인촌이 분리되어 있고, 도시 시설에서도 양자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는 ‘이중도시(dual city)’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즉 조선의 대도시들은 사회경제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이중도시’라는 ‘식민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도시의 발전도 있었다”고만 쓰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식민성’을 은폐하고 ‘근대성’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반박문」에서는 “도시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주거가 분리되는 현상은 비단 식민도시의 일만이 아니다. 오늘날 서울도 그러하며, 미국의 도시들은 더욱 심하다”고 쓰고 있다. 물론 부유층과 빈곤층의 주거 분리 현상은 식민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식민도시의 ‘민족별’로 주거 분리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부유층과 빈곤층의 분리 현상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 3) 식민지 경제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 (1)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문제

‘식민지시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부분을 보면, 우선 “총독부는 인력과 물자의 이동을 활성화하고 지배체

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교통·통신망을 대거 확충했다”고 쓰고 있다. 이어서 철도의 길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동차와 선박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통신시설이 얼마나 확충되었는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식민지 한국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서술은 일견 매우 객관적인 서술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력과 물자의 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독자는 오해하기 쉽다. 즉, 일제가 조선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은 조선에 철도·항만 등 많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조선을 근대화시켰다고 주장해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반박문」에서 이 책의 저자들은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한반도 경제를 일본에 통합시킴으로써 제국 전체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일제의 목적이었다”고 하여 어느 정도 해명을 하고 있기는 하다(309쪽). 하지만 이 해명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정작 이 책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 (2) 경제성장률

이 책을 쓴 필자들은 오래전부터 식민지시기 조선에 상당한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그러한 내용을 이 책에 그대로 썼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식민지 한국의 연 평균 총생산은 인구성장률 1.3%를 능가하는 3.6%의 성장을 보였다”고 쓰고 있다(99쪽). 이러한 서술은 식민지 조선의 역사상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서술이다. 당시 식민지 조선에 투자된 자본은 대부분 일본 자본이었으며, 조선에서의 경제성장의 수익은 대부분 일본자본과 재조선 일본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조선 경제는 일본인들에 의해 사실상 장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한 1930년대 이후 조선에 들어선 공장들은 일본 본토의 대규모 자본의 투자에 의한 것이 많았다. 일본의 대자본은 만주까지 넓어진 시장을 위해 만주와 한반도를 포괄하는 ‘대일본 자본주의 경제권’을 설정하고 만주와 한반도의 시장을 목표로 조선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주로 북한 지역에 공장을 지었다. 따라서 이 시기 조선 경제는 ‘일본자본주의권’ 안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었다. 당시 한반도 경제라는 것은 독자적인 경제권이 아니었다. 따라서 한반도만의 경제성장률을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이 책의 저자들은 「반박문」을 통해 “일본 자본이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성장의 주요 과실이 일본인에 돌아간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 사실과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모순되지 않는다. (중략) 성장의 과실이 모조리 일본인으로 돌아갔다는 주장도 억측에 불과하다. 비평자는 오로지 수탈을 당하여 점점 피폐해지는 한국인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지만, 식민지시기 한국인은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조선에서의 경제성장의 수익이 모조리 일본인에게 돌아갔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는 ‘대부분’ 일본자본과 재조선일본인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식민지시기의 조선인이 피폐해진 것을 지적한 것을 무기력한 존재였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비약이다. 조선인도 나름대로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책과 같이 조선인의 자본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 경제성장의 수익이 대부분 일본자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식민지 한국의 연평균 총생산은 연평균 인구성장률 1.3%를 능가하는 3.6%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3) 쌀의 수탈과 지주제 문제

이 책은 식민지시대 한국인의 생활수준과 관련한 서술을 박스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른바 ‘수탈론’을 비판하면서 “쌀은 일본에 수탈된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따라 일본에 수출되었으며, 그에 따라 일본인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쌀을 대신해서 만주에서 조와 콩이 대용식품으로 수입되었다. 쌀의 1인당 소비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잡곡 등 대용식품과 기타 가공식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인당 열량 섭취가 줄어들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고 쓰고 있다(98쪽).

‘쌀의 수탈’은 단순히 일본으로 쌀이 많이 실려 갔다는 것만이 아니라 일본인 지주와 조선인 지주가 총독부 당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소작인들로부터 고율의 소작료를 거두어들이는 것부터가 사실은 ‘수탈’에 해당한다. 1920년대 중반 압태도 소작쟁의를 기점으로 조선의 소작농민들은 소작료를 4할로 낮추는 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총독부 경찰당국은 이를 극력 저지, 탄압하였다. 따라서 소작료는 5할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른바 수탈론에서 말하는 쌀의 수탈이란 유통과정에서의 수탈보다는 생산과정에서의 수탈에 더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반박문」은 “지금까지의 여러 교과서에서 쌀의 수탈을 말할 때는 총독부가 농민으로부터 쌀을 강제로 빼앗아 일본으로 실어간 것을 지칭하였다”고 주장하였다(316쪽). 그러나 과거의 국사 교과서들을 보면, 일제라고 하였을 뿐이다. 이는 일본제국주의나 일본자본주의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이지 ‘총독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농민들이 고율소작료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쓴 것에 이어서 나온 표현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지주-소작관계에서의 수탈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에 쌀이 실려 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공출제가 없었던 시절에 총독부가 강제로 농민들로부터 쌀을 빼앗아갔다고 쓴 교과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반박문」에서는 “비평자는 맑스주의적 시각에서 고율의 소작료 그 자체를 수탈이라 강변하고 있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다르게 해석된다. 근대사회에서 지주-소작관계는 경지 임대차를 둘러싼 계약관계이고, 소작료의 크기는 계약 당사자들의 교섭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세계학계의 통설이다”라고 주장하였다(316쪽). 물론 근대사회에서도 경지 임대차를 둘러싼 계약관계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작료율이 50%가 넘었던 식민지시대의 지주-소작관계를 근대사회의 정상적인 임대차관계 또는 계약당사자들의 교섭력 정도를 반영하는 계약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식민지시대의 지주-소작관계는 여전히 신분제와 결합되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 지주-소작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소작인들은 소작료 외에도 별도의 노동이나 갖가지 뇌물을 지주에게 바쳐야 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주제와 고율소작료 관행은 총독부 권력에 의해 강력히 뒷받침되고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해도 이런 상황에서의 고율소작료는 ‘수탈’이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 4) 식민지조선의 교육 현실에 대한 서술에 대하여

### (1) 취학률의 문제

우선 총독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1918년 이후의 3면 1교 정책, 1928년 이후의 1면 1교 정책을 설명하고, 1930년대 후반 이후에 대해서는 “1936년부터 1946년까지 취학률 60%를 목표로 하는 제2차 확충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식민지 말기의 취학률은 40%를 넘었다”고 쓰고 있다(89쪽). 그런데 식민지 말기 취학률이 40%를 넘어선 것은 맞지만 왜 이 시기에 총독부가 취학률을 높이려 했는지에 대해 이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1934년경부터였으며, 특히 1936년 미나미 지로 총독이 부임하여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강조하면서 '황국신민화'를 목표로 하는 보통교육의 확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보통교육의 확장이 더욱 요구되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 징병제를 실시하여 조선의 청년들을 전장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쓰지 않은 채 취학률이 40%를 넘었다는 점만 쓰게 되면 총독부가 조선인 교육을 위해 크게 노력하였다는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1920년대 교육 수요의 폭발과 관련하여 1910년대 보통학교 학생 수가 3만 2천 명에서 8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1929년에는 44만 3천 명으로 늘어났다고 쓰고 있다(105쪽). 이 부분도 이 수치만을 보면 비약적인 증가로 해석되기 쉽다. 하지만 1929년의 조선인 취학률은 17.4%에 지나지 않았다. 1945년 해방될 당시 취학률은 약 50% 정도이고 그 비율은 남자 70%, 여자 30%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10년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취학률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해방된 지 15년만인 1960년 한국인의 취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일제의 식민지배 35년만인 1945년에 취학률이 50%가 된 것은 결코 비약적인 상승은 아니었다. 만약 한국이 식민지화되지 않았다면 한국인들의 취학률은 훨씬 더 이른 시기에 50%에 도달했을 것이다. 「반박문」은 박찬승 교수가 한국인의 열성적인 교육열에 대해 애써 눈을 감고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그 반대이다. 한국인들의 열성적인 교육열을 총독부가 억누르지 않았다면 훨씬 일찍, 더 많은 수가 학교에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교수는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식민지의 현실을 언급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 (2) 중등학교 진학의 문제

1930년대에 중등학교 입학난이 심화되자 이 책에서는 중등학교 설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고 쓰고 있다(105쪽). 하지만 대부분의 중등학교 설립운동은 총독부에 의해 좌절되었고, 총독부 또한 중등학교를 거의 설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쓰고 있지 않으며 그것이 총독부의 교육 정책이 우민화교육정책, 즉 보통교육 위주였기 때문이었다는 언급도 없다.

특히 남학생들의 공립고보의 수는 1925년부터 1935년까지 15개로 하나도 늘지 않고 1938년에 와서야 20개가 되었으며 1938년 현재 공립여고보도 11개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사립고보와 사립여고보는 합쳐서 24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보와 여고보는 1938년 현재 겨우 55개였다. 그밖에 실업학교를 보면, 일본인과 조선인 공학의 공립실업학교가 1938년에 62개였으며, 조선인 위주의 공립실업보습학교가 1938년에 123개였다. 이를 통해 보면 조선인을 위한 인문계통의 중등교육은 최대한 억제하고 실업계통의 중등교육만 다소 숨통을 틔워놓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박문」은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1933년에서 1942년 사이 중등 교육기관은 79개교에서 142개교로 늘어났고, 한국인 학생수는 1만 9,614명에서 4만 309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였다. 「반박문」의 지적대로 중일전쟁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38년부터 중등학교는 약간 늘어났다. 조선인들이 다니던 공립고보와 일본인들이 다니던 공립중학교의 학제가 통합되어 공립중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1942년 현재 그 수는 52개였다. 공립여고보도 공립고등여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1942년 그 수는 59개였다. 사립고보는 1942년에 19개로, 사립여고보는 1942년에 12개로 늘어났다. 이로써 인문계통 중등학교는 모두 142개교가 되었다. 하지만 142개교 안에는 이전에 주로 일본인들이 다니던 학교 38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1938년 55개에서 1942년

104개로 늘어난 셈이다. 학생수도 25,781명에서 40,309명으로 늘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야 이와 같이 중등학교 학생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일본인들이 다수 전쟁에 동원되면서 그들의 자리를 충원할 인적 자원이 필요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유학생의 문제

이 책은 국내에서 고등교육(대학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쓰고 있다. 특히 일본 유학생 수가 1925년 2,600명, 1937년 9,900명이었고 1940년대에는 2만 9천명까지 늘어났다고 쓰고 있다(106쪽). 그런데 1930년대 후반 이후 크게 늘어난 유학생은 고등교육보다는 중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일본에 간 경우가 훨씬 많았다.

1930년대 보통학교의 수가 크게 늘어나 보통학교 졸업자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들이 갈 수 있는 고보와 여고보의 수는 극히 적었다. 1930년대 후반 보통학교 졸업자 가운데 고보·여고보 진학자는 5%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그 이전보다도 줄어든 수치였다. 이처럼 보통학교는 늘어났지만, 중등학교는 거의 늘어나지 않아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학을 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간 것이었다. 1939년 현재 일본에 재류하는 조선인 유학생은 16,304명인데, 그 가운데 중등학교 재학자는 10,774명이었다.

이 때 유학생들은 대개 지주와 상공업자와 같은 부유계층의 자제였지만, 고학생의 수도 적지 않았다고 '대안교과서'는 쓰고 있다. 1925년 일본 내무성 경보국의 조사에 의하면, 동경재류 조선인 유학생은 1322명인데, 그 가운데 625명이 고학생이었으며, 1926년에는 고학생이 7백 명을 넘었다고 한다. 반수가 고학생이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1939년 당시에는 "부형으로부터 학비의 지급을 받아 전심 공부하는 자는 비교적 적고, 그 대부분은 신문배달, 잡업 등에 종사 고학하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1910년대와 20년대 초 즈음에는 부유층의 자제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미 1920년대 후반부터는 고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학생들의 계층도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민족운동에 대한 서술에 대하여

이 책은 '민족' 대신 '개인'을 주체로 한 역사를 쓰겠다고 책머리에서 선언했기 때문인지 '민족운동'에 관한 서술은 전반적으로 소략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의 기원'이라는 차원에서 크게 부각시키는 반면에 다른 계열의 운동은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민족운동 관련 서술에서 특히 어색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조선공산당, 신간회, 노동·농민운동을 하나의 절로 묶어 '민족주의 계급운동'으로 제목을 붙인 부분이다. '계급운동'이나 '사회운동', '대중운동'이라는 말은 많이 쓰여 왔지만 '민족주의계급운동'이라는 말은 상당히 낯설다. 그리고 신간회 운동은 당연히 '민족주의 운동'의 범주 안에 넣어서 서술해야 하는데, 이를 계급운동의 범주 안에 서술한 것은 잘못이며 신간회의 3대 강령은 신간회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간회 간부들이 광주학생운동 당시 민중대회 사건으로 검거된 일이 있었는데, 이를 "공산주의계열의 주요 간부들이 대거 구속되었다"고 서술하였다(123쪽).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당시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된 신간회 간부는 중앙집행위원장 허헌과 이관용, 조병옥, 홍명희, 이원혁, 김무삼 등 6명이었는데 이들은 당시 민족주의계열의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아울러 민족운동 관련 서술 부분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가들의 갈등'이라는 박스 기사를 만들어 박용만계,



안창호계와 이승만계의 갈등문제를 다루고 있다(131쪽). 명색이 '대안교과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박스로 다룰 필요가 있는지 우선 의심스럽다. 임정 외에 독립운동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박스기사로 다루지 않으면서 독립운동가들 내부의 파쟁에 대해서 특별히 박스기사로 다룬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짐작컨대 이는 이승만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서는 안창호와 이승만의 갈등이 이승만의 임정 대통령 면직 사태로 까지 발전했다고 쓰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다. 임정의 임시의정원은 1925년 3월 이승만이 그동안 임시대통령이면서도 미주에 있으면서 전혀 임정을 돌아보지 않은 점을 들어 그 대신에 박은식을 대통령대리로 임명했으나 그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미주 동포들로부터 거두는 인구세를 임정에 보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승만을 '탄핵'한 것이다.

「반박문」에서는 안창호계열이 이승만 탄핵 발의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이승만 탄핵에는 이승만과 안창호 사이의 복잡한 갈등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는 지역적인 것으로 그것이 이승만 탄핵의 주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이 박스 기사는 이승만 탄핵의 책임을 안창호계열에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승만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는 다른 곳에서도 엉뚱하게 나타난다.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과 관련한 서술의 제목이 '만주사변과 이승만의 외교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이승만이 1933년 『만주의 한국인』이라는 책을 서술하여 국제연맹에 제출하였다는 부분을 크게 부각시켜 쓰고 있다. 이 책에서는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한 개인의 활동을 이처럼 부각시킨 경우가 없었다. 이승만에 대한 서술이 그 유일한 예라 할 수 있다. 이 책 곳곳에서 이승만은 자주 언급되고 있고, 영웅시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반박문」은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식민지기의 그의 활동에 관해서 다른 어떤 인물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쪽)라고 묻고 있다. 이 「반박문」 부분은 이 책의 저자들이 역사서술과 역사교육을 어떤 특정한 목적과 관련시키려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이 책에서는 김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소략하게 쓰고 있고, 심지어 “한인에국단을 조직하여 항일 테러활동을 시작하였다”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봉창·윤봉길의 의거는 ‘테러활동’이며, 그들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 참고로 말하면, 역사학계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의열투쟁’이라 부르고 있다. 이 책은 김구의 남북협상과 관련해서는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국제연합의 결의를 반대하고, 북한에 들어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 이 책에서 김구에 대한 서술이 인색한 것은 아마도 김구가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 듯하다. 하지만 김구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곤경에 처해 주요 인물들이 모두 임정을 떠났을 때도 임정을 굳게 지켰으며, 1948년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들어서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 남북협상의 길로 나아간 인물이다. 평생을 독립운동에 종사한 김구로서는 차마 분단 정부에 참여할 수는 없었고,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구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른바 ‘대안 교과서’라는 책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위와 같은 지적에 대해 「반박문」은 ‘테러’ 용어에 대한 비판은 단어 수준을 둘러싼 비방에 불과한 것이며, 한국사학자들도 일부 그런 표현을 써왔고, 좋은 뜻을 담아 좋게 쓰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적어도 ‘대안교과서’라 할 때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테러’라는 단어는 과거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폭력 수단을 써서 적이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가 변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즉, 2001년 9.11사태 이후 테러는 공격목표가 요인으로부터 일반 시민, 비전투요원으로 바뀌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단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자들의 말대로 좋은 의미를 담아 쓰려 한다면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다른 단어로 바꾸어 쓰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제 말기에 이 책은 “해외 독립운동은 여러 분파로 나뉘어 서로 갈등하였다”고 쓰고 있다(131쪽). 하지만 주지하듯이 해외 독립운동 계열이 여러 분파로 나뉘어 갈등을 겪은 시기는 주로 1930년대라고 할 수 있고, 태평양전쟁 이후에는 오히려 연대와 통합이 모색되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40년 이후 임정에는 여러 세력이 모여들어 모처럼 통합된 임정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임정계열과 화북조선독립동맹 사이에서도 연대가 모색되고 있었다. 또 국내의 건국동맹도 역시 국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반박문」은 1939년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등의 소개를 통해 독립운동 세력의 연대를 설명하였다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교과서포럼의 책은 국외 독립운동의 마지막 시기를 설명하면서 “중국에서는 임시정부에 대항하는 민족혁명당이 활동했고, 미국에서도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비판하는 한길수와 같은 한국인들의 활동이 있었다. 미국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알 수 없기에 임시정부나 다른 단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중략) 그러나 당시 해외 독립운동은 여러 분파로 나뉘어 서로 갈등하였다”(131쪽)라고 분명히 쓰고 있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중국 관내 독립운동 세력, 즉 김구세력과 김원봉세력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결합하였음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김원봉세력은 1942년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에 참여했으며, 1944년에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까지 참여함으로써 임정은 마침내 좌우를 망라하는 정부형태를 갖추 수 있었다. 이는 1920년대 초의 임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해방을 앞두고 임정이 이루어낸 값진 성취였다. 즉 태평양전쟁 말기 국외 독립운동 세력은 점차 연대와 통합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평자는 이 시기 독립운동을 설명하는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 분파로 나뉘어 서로 갈등하였다”라고 쓴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5) 일제 말기 강제동원에 대한 서술에 대하여

여자정신대근로령 부분에 대해 ‘대안 교과서’는 박스로 자세히 쓰고 위안부 문제는 측주으로써 작게 기술하였다. 정신대문제를 자세하게 쓴 것은 이 문제가 위안부 문제와 다름을 강조하고 싶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군위안부 문제는 업자들이 여성들에게 큰 돈벌이가 있다고 해서 여성들이 이러한 핏에 빠져서 갔다는 식으로 서술하였다(93쪽).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말하고 있는 강제연행, 인신매매, 유괴 등을 이 책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이 서술이 문제가 되자 그동안 ‘종군’ 위안부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 온 정진성의 저서를 자신들이 인용한 것으로 변명하였다. 그러나 정진성의 저서 가운데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사료로 제시함으로써 ‘종군’ 위안부 문제를 왜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일제 말기 많은 한국인들이 점차 독립의 희망을 잃어가면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면 이제까지의 차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고 쓰고 있다(132쪽). 이는 이광수 등 이른바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 늘어놓은 변명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당시 ‘차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 지 의심스럽다. 또한 전쟁 말기의 사회상과 관련해서도 “보통의 한국인들은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전시체제에 참여하였다. 황민화교육이 한창이던 전시기에 수많은 한국인 학생이 각급 학교에 다투어 진학하였다"고 쓰고 있다(132쪽).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시체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조선인이 얼마나 될지 역시 의심스럽다. 수많은 한국인 학생이 각급 학교에 다투어 진학하였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초등학교는 다소 늘었지만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는 거의 늘지 않았고, 1942년 이후에 와서야 약간 늘었을 뿐이었다. 일제 말기 학교 현실을 말하려면 학생들이 수업 대신 공장 노동이나 비행장 건설 노동에 동원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 (6) 친일의 옹호

뉴라이트는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서도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에게 경제 활동의 자유를 배제하지 않았으며, 한국인 자본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 이상 존재했다는 사실을 들어 한국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제로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다면 조선인 자본가 비율은 10%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 또한 경성방직이나 화신이 친일반민족행위나 불필요한 국방헌납을 하지 않고 기업의 자기 성장을 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백산상회와 안희제 선생이 겪어야 했던 '식민지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상적인 '대안교과서'라면 화신이나 경성방직의 성장만을 높이 칭송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러한 경제성장이 이들 사주(社主)의 도를 넘은 친일과 이로 인한 조선민중의 희생의 대가였음을 같이 서술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러한 역사의 진실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본의 성장 그 자체만을 주목한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공공의 책임성도 필요없는, 오로지 자본의 증식만이 목적인 "영혼 없는 자본가"가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할 기업인의 상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성방직이나 화신은 민족자본이라기보다 제국주의 권력과의 정경유착과 모랄 헤저드를 기층으로 한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성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정경유착과 불법운영으로 물의를 빚는 한국의 재벌들이 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적극 응원하는지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대안교과서'는 일제의 폭력 앞에서 모든 한국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수동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인은 일제의 폭압과 지속되는 전쟁 승리에 "점차 독립의 희망을 잃어 갔다"고 서술해 어차피 항일운동(독립운동)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한 남은 것은 체제에 대한 순응과 협력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불가능론'을 기초로 "과거 민족주의 활동으로 이름 높던 많은 지도적 인사"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유명한 교육자, 기업가, 문화가, 음악가, 미술가, 무용가, 종교계"는 물론 보통의 한국인들까지 모두 일제에 협력하거나 '전시체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친일' 또는 '협력'은 필연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인들이 일제에 협력한 동기에 대해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면 이제까지의 차별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이들은 일제에 협력하는 대가로 차별을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한 결과는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전시공업화 정책으로 늘어난 국내외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며, "하급직의 관료와 회사원은 징집된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남긴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었다. 상공업자들은 "1943년 전반까지 계속된 전시경제의 호황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sup>21)</sup> 한국인들이 일제에 협력함으로써 사실상 일제는 그

21) 『교과서 시안』은 '황국신민화와 전시동원책은 조선인이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고, 지도자는 물론 많은 평범한 조선인

기대에 보답해주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서술대로라면 전시체제가야말로 조선인에게 독립의 의지만 버리면 행복이 보장되는 '절호의 기회'였다. 왜 이런 서술을 하면서 '대안교과서' 필자들은 이 시기를 "일제의 폭압적인 전시동원체제"로 규정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가운데 가짐 비참하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된 것이 전시총동원체제'라는 사실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역사의 진실보다는 조선인들에게 '신분상승의 기회가 온 절호의 시기'였다.<sup>22)</sup> 친일은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잡는 수단으로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인간의 이기심의 발휘이자 자신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였다. 그리고 이들 엘리트세력들이 친일을 통해 근대 문명의 제반 능력을 습득해 해방 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다는 논법으로 이어가기 위한 교묘한 장치이기도 하다. 일제에 저항하기 어려운 조건 아래 지도자는 물론이요 대중들까지 굴종하는 "숨죽여 지내는 시기"라는 상황론과 독립불가능론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식이다.

이미 1937년부터 45년 일제 패망기까지 언론에 보도통제되었을 뿐 일제의 기밀문서에 따르면 수많은 항일 비밀결사가 국내 곳곳에서 조직되고 있었다. 또한 공장의 태업과 징용-징병 거부와 입산 활동, 유언비어의 유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저항을 전개하고 있었고, 45년 7월에는 서울 한복판인 부민관에서 친일파 박춘금을 폭사하려는 의열투쟁마저 있었다. 좌익의 경성공그룹이나 좌우를 아우른 건국동맹과 같은 전국적 지하운동체는 다가올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감옥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넘쳐나며 해외에서는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도 여운형은 '건국'동맹을 조직했듯이 다가올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듯 전시체제 어려운 조건 아래서도 독립을 준비하며 투쟁한 수많은 항일조직사건과 개인들의 투쟁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순응과 타협만이 당대의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현행 교과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시기 활동한 애국지사들에게 참으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대세에 순응하고 힘에 굴복하는 것과 그 속에서 자신의 성공 기회를 잡으라는 처세를 교과서를 통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아가 '대안교과서'의 독립불가능론은 상황론에 기대어 '친일불가피론'을 정당화한다. 결국 모든 친일 행위는 사실상 시대 상황의 산물일 뿐이며 구체적 친일 행위자의 역사적 책임은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보자면 1910년 합병 또한 상황론상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완용의 매국 행위도 그러한 시대에 대응한 불가피한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 이완용은 자신이 친미파에서 친러파로 그리고 친일파로 변신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때에 따라 적당함(宜)을 따르는 것(制)일 뿐 다른 길이 없다. 무릇 천도(天道)에 순하추동이 있으니 이를 변역(變易)이라 한다. 인사(人事)에 동서남북이 있으니 이를 또한 변역이라 한다. 천도 인사가 때에 따라 변역하지 않으면 이는 실리를 잃고 끝내 성취하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다.<sup>23)</sup>

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협력하기도 했다'고 해 조선인의 자발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 지식인들이 친일화한 동기를 전쟁에 협력하면 차별에서 벗어나리라는 기대감으로 친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 교육받은 많은 조선인들은 징집된 이들을 대체해 관청과 회사에 남긴 높은 자리로 상승하고 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교과서 시안』, 2006, 107-108쪽)

22) 경제사 측면에서도 이들은 이 시기 국가총동원체제에 입각한 산업합리화 등을 높이 평가한다.

23) 『일당기사(一堂紀事)』, 803-804쪽

이완용의 ‘수시변역(隋時變易:시대 상황에 맞춰 적응하는 것)’은 모든 친일파들의 대표 변명이었다. 친일파들이 언제나 강조한 게 ‘시대의 대세에 순응했을 뿐이며, 친일이 이 시대 민중들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을 ‘대안교과서’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특히 국제 정세에 대한 한국인의 능동적 대응에 대한 인식에서도 잘 드러난다.

교과서포럼 관계자들은 한국인들이 국제 정세를 잘 이용한 것을 대한민국 성공신화의 비결로 매우 강조하고 있다. 전근대시대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20세기 전반기에는 일본을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통해, 그 이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들이야말로 일본 주도의 질서 속에 잘 적응하면서 성공신화의 기초를 일군 자들일 것이다.

한국인들이 일제에 협력한 동기에 대해서도 “일제의 침략전쟁에 협력하면 이제까지의 차별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이 주장은 이광수 등 많은 악질 친일파들이 자신의 친일 행위를 변호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런 논리에 입각한 일제와 친일파의 동원 정책의 희생자였다. 전시체제가 대다수 조선 민중들은 일제의 전쟁 동원 대상이었지 친일 주체가 아니었다. 친일은 적극적 능동적 행위이며 행위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 일제의 전쟁을 성전이라고 떠들면서 조선인들을 전쟁에 내몬 사람들과 징병·징용·정신대 명목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 같이 일제에 협력한 행위로 몰아붙여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징병·징용 등으로 일제 침략전쟁의 소모품으로 끌려가는 대다수 조선인이 정말 징병·징용에 지원하면 차별을 벗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말인가?

‘대안교과서’ 필자들은 교묘하게도 ‘일제에 대한 (전쟁)협력’과 ‘전시체제에 참여’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도자급 인사를 포함한 지식인·종교인·문화예술인·기업인 등의 적극 친일행위를 일반 민중들의 ‘제국주의 전쟁 희생’과 섞어버렸다. 결국 모든 한국인이 일제에 협력을 했다고 서술해 전 조선민중을 일제 협력자로 몰아가 모두가 죄인이거나 모두가 무죄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친일파를 정당화하고 있는 ‘대안교과서’의 ‘국내의 전쟁협력과 저항’이라는 제목은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고 바꾸어도 되지 않을까?

#### 4. 해방 이후 서술의 문제점

##### 1) 부실한 실증주의 - 서술의 정확성 문제

이 책의 저자들은 “철저한 실증주의”를 표방(5쪽)하지만 기초적인 사실 서술에서 오류가 많다. 1960년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대구 228학생시위는 야당 선거 유세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들을 일요일에도 등교시킨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일요일에 학생들을 선거 유세에 동원하는 것에 항의해” 집단 시위가 발생했다고 한다(173쪽). 1972년 2월 닉슨이 북경을 방문하여 미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두 국가가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카터 행정부 때의 일이다. 이 책에는 1972년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였다고 한다(205쪽). 김대중은 1961년 5·16쿠데타 직전 인제군 보궐 선거에서 처음 민의원에 당선되었는데 이 책은 1960년에 당선되었다고 하며(243쪽), 만주에 있었던 일본의 ‘관동군’과 ‘만주군’은 구별되는 것인데도 박정희는 만주 “관동군 장교”로 되어 있다(186쪽). 또한 “성매매특별금지법이 제정되어 공창제가 사실상 폐지되었다”(268쪽)는 아마도 ‘공창(公娼)’과 ‘집창(集娼)’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공창제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있었지만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 한국 여성 단체의 항의 운동으로 폐지되었다.

이와 같은 서술의 부주의함과 엄밀성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사실 자체를 잘 몰라서인지, 그 이유조차 알기 어려운 당황스런 오류도 있는데 “1973년 이후 북한과의 관계”라는 박스에는 “1973년 남북 대화가 단절된 후 1992년까지 남북 간에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구절이 나온다(228쪽). 이것은 사실 서술의 엄밀성을 떠나 저자들의 기억력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만약 이들이 서술한 대로라면 1985년의 이산가족 상봉 및 예술단 교환 그리고 같은 시기 진행된, 비록 차관급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직함을 사용했던 회담인 남북경제회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남북 간의 공식적 접촉이 아니라면 1973년 이전의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회담은 더구나 공식적 접촉이 아니다. 또한 1990년부터 시작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낳았던 남북고위급회담은 무엇이고 그들이 언급한 1992년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하는 의문점이 든다.

##### 2) 편향된 사실 서술 문제

‘대안 교과서’는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설명하면서 야당 후보 김대중의 “4대국 안전보장론”, “대중경제론” 등의 공약을 비중 있게 설명하고, 이러한 정책은 당시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선거에서 김대중이 많은 대중적 호응과 표를 얻은 것에 대해 “한국 정치에서 처음으로 포퓰리즘(populism)이 위력을 떨친 선거”였다고 서술한다(200쪽).<sup>24)</sup>

그런데 당시 김대중이 주장하여 또한 많은 관심을 끌었던 공약 중 하나가 서신 교류 등 남북 교류 및 접촉에 대한 주장이다. 남북 대화 문제는 최소한 4대국 안전보장론 및 대중경제론만큼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고, 선거 쟁점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런 공약이 책에 소개조차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 수개월 후 닉슨의 북경 방문 선언이 발표되고, 같은 해 8월부터 남북 대화가 시작되어 실현되었기 때문인가? 이 책은 또한 중요 정치적 국면을 다루면서 상당히 무리한 논리를 동원하며 야당 정치 세력을 미국에 훨씬 의존적인 세력으로 묘사하기 위해 노력한다.<sup>25)</sup>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색은 중요 사회적 쟁점을 형성했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책을 많이 소개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참신하고, 다른 역사책에도 참조될 만하다. 저자들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많은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최근 이 책에 담긴 역사관을 비판하기 위해 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모두 소개하였다. 그런데 교과서포럼의 저자들이 다수 참가하여 편찬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소개할 때에는 이 책에 수록된 “여러 논문의 문제의식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지만,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더 이상 민족주의만으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고 했다(271쪽). 물론 학자들대로 어떤 이념적·정치적 경향성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연구 작업이 이러한 성향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단순화되지는 않는다. 학문은 그 자체가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같은 이념적·정치적 입장을 가진 학자라도 그 안에 많은 차이가 있다.

24) 역사는 이미 결정된 길을 가기보다는 그때그때 결정되면서 형성되는 과정에 가깝고, 따라서 ‘실현 가능성’을 너무 단순하게 예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역사적 사고일 수 있다.(정창렬, 2001: 43-44쪽) 그리고 저자의 대중경제론에 대한 단순 해석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당시 김대중의 공약과 정치적 입장이 공평하게 제대로 소개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하자.

25) 『대안 교과서』는 1952년 정치파동을 서술하면서 “야당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협조를 얻어 정부 형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기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고 서술하였다.(163쪽) 당시 미국 정부가 개헌 문제까지 관여하였다는 뜻으로 임하는 이 서술은 정말 놀랍다. 이를 확증할 자료가 있으면 공개하기 바란다. 미국이 한국 정치에 가장 무지막지하게 개입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어떻게 소개되었을까? “이 책에 실린 주요 논문은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 혁명론에 입각하여 해방 후 한국 사회를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적 상태로 규정하고, 그 전체 위에서 625전쟁을 민족의 해방과 혁명을 위한 전쟁으로 규정하였다”고 했다.(237쪽) 이 책에 수록된 대부분의 논문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단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 저자들은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이러한 방식의 책 소개는 독재 정권기 금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배포한 공안기관의 팜플렛을 연상시킨다. 또한 한국사학계의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연구를 ‘자본주의 맹아론’으로 단순화시켜 서술하는 것(238쪽)도 문제가 있다.

### 3) 보편적 가치와 탈민족주의

‘대안 교과서’는 탈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민족보다는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역사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책머리에 ‘우리 민족’ 대신에 ‘한국인’을 역사적 행위의 주체로 설정한다고 명시하였다(5쪽). 이는 역사인식 측면에서 이 책의 가장 특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는 이 책의 서술 내용 안에서도 보편적이지 않다.

이 책은 ‘625전쟁’ 때 북한군이 남한 국민 8만여 명을 납치한 것과 송환되지 못한 국군 포로의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 정부가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 북한 정부에 어떠한 요구도 한 적이 없음을 들면서 “이 역시 인권이란 기초적인 가치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낮선 것이었던가를 뼈아프게 증언한다”고 통탄한다(161쪽). 이러한 문제 제기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인권의 차원에서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다. 그런데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적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군과 경찰이 대한민국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사건도 다수 발생하였다. 이 책에서는 비록 연도가 틀리기는 했지만 거창 사건에 대해 언급했으며, 짝막하지만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간인 학살 문제는 ‘4월혁명’ 직후 국회의 조사와 피학살유족회 등의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미 쟁점화된 바 있다. 그러나 군사 독재 정권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 거론하기조차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인권 차원의 문제제기가 없을까?

제주 ‘43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을 과연 좌익 세력에 의한 무장 반란으로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43사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대한민국의 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 책에는 ‘43사건’을 남로당의 무장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 없이 “대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만 서술하며(144쪽),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다. 이 책에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지 못한다. 과거에는 익숙한 것이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참으로 낯설다.

‘대안 교과서’는 탈민족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나 역사 서술은 건국, 부국, 민주 국가, 선진국으로 이어지며 국가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 물론 개인과 국가가 이분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발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쓰는 것이 곧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마무리 장을 보면 개인과 개인이 자연스럽게 또는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가족, 촌락, 학교, 교회, 우애단체 등의 각종 공동체의 매개를 바탕으로, 하나의 정치적 질서로 통합되는 “국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277쪽). 그러나 바로 위의 문단에서는

민족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통일을 둘러싸고 “정치 세력 간에, 나아가 국민 상호 간에 적지 않은 대립이 생기는 것은 개항 이후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 점은 하루 빨리 올바른 역사 교육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각 개인이 파편화되고 원자화되어 국가의 부속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또는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공동체를 매개로 국가에 통합된다면, 그러한 국가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를 지닌 정치사회 집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집단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이념이 존재하고, 당연히 역사를 보는 관점도 다양해진다. 다양한 역사적 견해를 ‘분열’로 이야기하는 사고방식으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통합이 아니라 특정 이데올로기와 역사의식으로 단일화되는 방식으로 국가적 통합 또는 ‘민족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민주적이라 할 수 있을까? 단일화된 역사의식은 그것이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 및 사회의 다양성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안 교과서’가 주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탈민족주의는 결코 분단형 국가주의의 발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 4) 지도자에 대한 강조와 정통론 사관

‘대안 교과서’는 건국의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과 근대화 혁명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역할을 강조한다. 역사를 설명할 때 구조와 주체이자 행위자를 어떻게 결합시켜 서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엘리트 집단 그리고 그 정점이 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일관성이 흔들린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 달성된 긍정적인 업적을 이야기할 때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부각된다. 반면 유신 체제의 수립 원인 등 비민주적 정치 행태가 언급될 때에는 중공업화, 안보 위기, 당시 정치 구조의 한계 등 환경적·구조적 문제가 강조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능력과 업적은 구한말부터 해방 이후까지 여러 본문 서술과 별도의 박스로 자세히 소개된다. 그렇지만 1960년 3·1부정선거를 언급하는 대목은 “자유당 강경파는”이라고 시작한다(173쪽). 또한 정통성을 강조해 3·1운동→한성 임시정부→상하이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계보가 도표로 명확하게 제시된다(117쪽).

정통론적 역사 이해의 압권은 이 책 말미에 붙은 “보론 북한 현대사”이다. 교과서포럼은 ‘대안 교과서’를 출간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글에서 현행 교과서가 북한 현대사를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은 체계 내에서 쓰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북한 수령 체제의 역사와 “한 지평에서 병렬적으로 서술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역사는 ‘보론’의 형식으로 체계를 달리하여 책 말미에 붙였다. 이러한 방식은 조선 후기 정통론적 역사의식과 서술을 연상시킨다. 유교적 관점에서 정통론에 충실했던 사서들은 정통 국가와 비정통 국가에 대해 완전히 다른 체계를 사용하고 글자 크기도 달리해서 서술하였다.

구한말 개화파 지식인들은 역사 서술에서 나름대로 근대 사학의 형식과 방법론을 수용하면서 외형상으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작 내용 면에서는 유교 사서의 정통론적 역사서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새롭게 근대적 역사 서술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과 방법론을 충분히 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통론적 역사 서술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21세기에 편찬된 ‘대안 교과서’에 정통론적 역사의식의 잔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 책이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또한 중세 사학의 전통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다. 전통적인 기전체

(紀傳體) 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받은 것은 인물의 전기(列傳)였다. 중세 유교 사학의 전통에서 인물의 평가 문제는 언제나 주된 관심사였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현대사 부분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교과서포럼의 저자들은 한국 현대사 서술에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평가 문제를 대단히 중시하고 집착하며, 지도자 평가론을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대화선진화를 거듭 강조하지만, 다른 책과 비교해볼 때 전근대적 역사 서술의 잔재가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

### 5) 분단의 뗏

‘대안 교과서’는 북한에 대해 확실하고도 선명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 책의 내용은 북한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 또한 역사적 평가에서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가치도 정반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를 기본적으로 사고하는 방식, 서술하는 방식은 어떠할까?

냉전 시기 남북의 체제 경쟁, 정통성 경쟁이 치열할 때 양쪽의 교과서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각자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국가를 주도했던 세력과 관련된 역사를 배타적으로 부각시키고, 상대방 국가의 건국 주도 세력과 관련된 역사는 철저히 배척하였다. 북한은 임시정부를 비롯한 우익 민족주의자의 역사를 삭제하였다. 특히 유일 체제가 강화되면서 같은 공산주의자의 활동이라 해도 만주 빨치산 세력이 아닌 국내파 공산주의자와 관련된 역사는 소략하게 취급하거나 비난할 때만 언급하였다. 수령중심 사관 하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당연히 크게 부각되고, 그 과오나 허물은 물론 조금도 언급되지 않는다.

냉전과 독재 정권 시기의 남한 역사 서술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강조되고 좌파 항일 운동이 역사 서술에서 배제되었으며, 집권 세력의 업적과 역할이 편파적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서는 민주화가 진척됨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교과서포럼이 비난하는 현행 교과서들은 북한의 지배 집단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등도 언급하고, 여전히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 운동사를 서술하면서도 일제 식민지 시대 좌파 세력의 항일 운동도 서술하며 좀 더 포용성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또한 과거 집권 세력의 과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서술하였다. 이에 역사 서술의 방식 면에서는 북한의 그것과 훨씬 더 차별성을 넓혀갔다.

그런데 ‘대안 교과서’는 일부 진전된 바가 없지는 않지만 다시 과거로 회귀한 듯한 인상을 준다. 강한 정통론적 역사인식이 나타나며, 집권한 지도자의 역할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훨씬 강조된다. 이른바 ‘건국 60주년’에 발행된 책이라 그런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곳곳에서 강조된다. 독재 정권기를 포함하여 이토록 이승만 대통령의 활동과 업적을 부각시킨 교과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집권한 지도자의 공적은 강조되지만 그 허물은 감추어지거나 소극적으로만 언급되며 대한민국의 주류 집단과 기본적으로 같은 이념을 공유했던 보수 야당 세력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서술을 한다. 다시 냉전의 과거로 회귀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역사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서술방식 면에서는 북한의 역사 서술과 오히려 닮아가고 있다. 적대적이면서 닮아가는 이러한 난감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안 교과서’는 해방 직후사 서술에서 북쪽이 먼저 분단 정부 수립에 착수했다고 하면서 여기에 맞서 남쪽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를 놓고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사실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방식의 역사인식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소련과 북의 지배 집단이 먼저 분단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여기에 맞서 남쪽도 분단 정부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처 방법이었을까? 같이 분단 정부를 수립해서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이는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 분단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민족의 통합과 미국과 소련의 타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단을 저지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를 들어 잘못된 것 자체를 정당화하고 최악을 들어 차악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함몰되다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자체에 대한 성찰과 극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덩어리에 빠지게 되고, 양자는 잘못된 것을 공유하며 닮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냉전 시기 남북한이 체제 경쟁, 정통성 경쟁 논리에 함몰되어 있을 때 자주 나타났던 현상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더욱 치열해진 남북한 체제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유신 체제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유신 체제가 체육관 대통령 선거는 “단수 후보”, “99% 이상 찬성” 등 북한의 선거와 오히려 닮아가는 양상을 보였다.<sup>26)</sup> 이러한 것이 바로 분단의 뗏이라 할 수 있다. 탈냉전과 민주화 이후 대부분의 현행 교과서들은 이러한 뗏에서 나름대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안 교과서’는 여전히 북한과의 체제 경쟁, 정통성 경쟁에 집착하면서 이 뗏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다. ‘대안 교과서’는 한국 현대사를 ‘분단 시대론’과 ‘분단 체제론’에 입각해서 보는 것에 대해 거듭 비판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책의 내용은 오히려 분단의 완고한 규정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 6) 친일파의 응호

‘대안교과서’는 제헌의회 당선자들을 분석한 것을 기초로 건국과정에서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친일파는 모두 배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과도입법의원과 제헌의회의 피선거권 규정 자체가 “(친일)민족반역자를 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먼저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헌의회에 규정된 선거권의 경우 입법위원의 그것보다도 크게 후퇴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제헌의회의 국회의원 선거권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2. 일본 제국의회 의원이었던 자”로, 과도입법의원보다 그 적용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sup>27)</sup>

한편 제헌의회 선거는 해방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친일파에 대한 대중의 적개심이 매우 높은 시기였다. 피선거권이 있는 친일파라고 해도 친일 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 출마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미군정의 친일파 중용 정책에 의해 피선거권 제한이 된 경찰관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 등은 이미 경찰 또는 군의 요직 또는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이 굳이 민중의 지탄을 받으면서 선거에 출마해 자신의 친일 이력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

교과서포럼이 이러한 제헌의회 당선자의 직업과 경력을 분석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을 “크게 보아 개화기 이래 구래의 중간 신분으로서 개화사상을 체득하고 근대적 문물을 수용하면서 전문적 직업 능력을 키워온 민족주의자들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들이 예를 든 대부분 인사들은 민족주의자라기보다 자본주의 근대화론에 입각한 중상류 엘리트층을 일컫는다. 반공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도 민족주의라고 규정할 논리 근거는 없다. 실제 좌익만이 아니라 민족주의 주류는 분단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제헌의회

26) 유신체제가 한 인권 단체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보도한 신문 기사와 반공 교과서에 있는 북한의 선거 방식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대비시켜 당시 한국 정치 현실을 풍자하는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조갑제, 1987: 66쪽)

27) 김득중, 「1948년 제헌국회 선거과정」 『성대사림』 제1집, 11-12쪽. 실제 친일인명사전에서 규정한 친일인명수록대상자 기준과 비교해도 제헌의회의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규정은 친일파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에 대부분 불참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항일의 상징이자 정통성이 가장 강하였던 김구를 비롯한 임정계열이나 안재홍·김규식과 같은 중도우파는 물론 여운형 등의 중도 좌파와 박헌영 등 좌익의 지도자 대부분이 제헌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독립운동가의 절대 다수가 분단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이른바 건국과정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더 역사교과서 다울 것이다. 전체 제헌의원 당선자 209명 가운데 한번이라도 민족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고작 68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서글픈 것 아니겠는가! 제헌의원 당선자 가운데 지속적으로 항일을 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었다. 제헌의회가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정통성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은 논리나 사실 면에서 틀리다.

‘대안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민족주의 정통성을 얘기하면서 ‘건국’ 이후 대한민국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급 간부들 가운데 상당수가 친일파 출신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 시기 역대 대통령, 주요 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군과 경찰 수뇌부를 점한 친일파들의 비중은 대한민국이 과연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이다. 2년 전 민족문제연구소와 세계일보사가 공동 기획 조사한 특집 기사 “1-3공 파워엘리트 해방 전 이력 대해부”는 대한민국 수립 후 제3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친일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일협력자가 대한민국 권력의 요소요소를 얼마나 장악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sup>28)</sup>

이 부분을 슬쩍 빼고 제헌의회만을 논하는 것은 대단히 자의적이며 그 동기가 의심스럽다. 이승만 대통령 경우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친일파와 손을 잡았고, 군·경찰 계통 친일파들은 이승만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독재 권력의 앞잡이로 변신했다. 미군정 시기 친일파 청산은 실패했지만, 제헌의회가 반민특별법을 제정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특위가 출범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청산을 시종 반대하였고 결국 1949년 6월 6일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해산 시켰다. 이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이 1949년 7월 7일 총사직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8월 13일 공소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무산되고 말았다.

‘대안교과서’는 반민특위가 경찰의 습격을 받고 이후 해체되었다고만 했지, 왜 경찰 습격을 받았는지 누가 지시했는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반민특위 해체 결과 친일파 청산이 실패했다는 것도, 친일파들이 친일파 청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하려고 한 사실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친일세력들이 얼마나 어떻게 대한민국 권부(權府)를 장악했는지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 V. 맺음말

이들이 그들의 의견을 학문적 연구의 결과물로 제시하면 상호 간의 논쟁으로 그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같이 정치권, 수구 보수 운동 단체 및 언론과 결합하여 역사 교육 문제를 놓고 정치 공세,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는 것은 문제다. 이들은 한국의 역사 교육을 걱정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상은 오랫동안 역사학계와 역사 교육자들이 노력해온 결과물인 현행 교과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을 뿐이다. 대안

28) “1-3공 파워엘리트 해방 전 이력 대해부”(『세계일보』, 2006.8.7-8.10) 참조.

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로 위험하면서도 부실한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책이 마치 기존 교과서를 대신할 ‘대안’인 것처럼 선전해주는 일부 언론이다. 과연 그런 기사를 쓴 기자는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 이 책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알고 기사를 썼는지 의문이다. 이들의 기사에서는 이 책에 대한 역사학계의 비판이 전혀 다루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과서포럼의 주장만을 기사화하는 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적어도 언론이라면 입장의 차이를 떠나 역사학계의 주장을 소개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스스로 ‘한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교과서포럼이 낸 이 ‘대안’이라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적어도 ‘합리적 보수’라면, 자기 민족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과 식민 지배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옹호하는 이런 책을 ‘대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백번 양보해서, 해방 이후의 역사는 보수적 관점에서 보려고 할 수 있지만 식민지 이전의 역사와 비록 실패하였으나 근대 국민 국가를 위해 노력하였던 대한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의 서술이 ‘대안’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일본의 후소야 교과서와 같은 역사 왜곡을 비판할 자격은 더욱 없다. 교과서포럼은 한국판 새역모이며, 이 책은 한국판 후소야 교과서에 앞서 간행되었던 『국민의 역사』와 같은 역사관과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극우 역사학자들은 이 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에서도 교과서포럼의 ‘대안 교과서’가 나오는데 왜 일본 교과서를 왜곡이라고 하느냐는 일본 학자들의 반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교과서를 만들든지 한국 측에서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좁아져 버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일본의 우익들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책인 것이다.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 구로다 가쓰히로(黒田勝弘) 서울 특파원은 이 책을 극찬하면서 현행 교과서를 “좌익민중사관”, “한국판 자학사관”으로 매도하고 “당연한 교과서 만들기에 바야흐로 서로 고생하고 있다”고 논평했다.<sup>29)</sup> 이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것은, 과연 필자가 ‘진보적 역사학자’이기 때문일까.

사실 이 책은 워낙 내용도 부실하고 교과서로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관심의 대상은 될지언정 교육 현장에 줄 충격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일부 보수 세력들이 언론 및 정권과 결합하여 억지로 이 책을 확산시키려 할 가능성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과거 새역모가 산케이신문 계열의 출판사를 통해 1999년 『국민의 역사』를 간행하고, 이어서 2000년에 교과서 검인정을 받아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려는 운동을 벌인 바 있다.

아마도 교과서포럼은 같은 길을 걷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권력을 장악한 것에 힘입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현행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까지 나서서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을 하고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의원들이 벌이는 색깔공세, 서울시 교육감의 월권적 행위 등에는 모두 교과서포럼의 역할이 크다. 나아가 지난 정권까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과 검인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교육부가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좌편향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 집필자와 단 한차례의 논의도 해 본 일이 없으며 역사학계와 역사교사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수정요구를 듣지 않으면 장관이 직권수정을 하겠다는니 검인정을 취소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으로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지금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열심히 입시를

29) 구로다 가쓰히로, “당연한 교과서” 『산케이신문』 2008. 4. 1.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교과서가 좌편향이니 고쳐야 한다고 하면 과연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혼란과 우려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지만 필자들은 부당한 수정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교과서의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역사학계와 역사교사들이 결코 이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말 이들이 역사학과 역사교육을 걱정했다면 먼저 학문적 성과를 통해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보수세력과 결합하여 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일본의 역사학계와 시민 운동 단체들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같이 위험한 역사인식을 청소년에게 유포하려는 새역모에 맞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그 결과 후소야 교과서는 다행스럽게도 1%도 안 되는 저조한 채택률을 보였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양심 있는 역사학자 또는 역사 교사들이 우리의 역사를 다시 식민사관으로 회귀시키려는 이러한 음모에 맞서서 치열한 싸움을 벌일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며 정권 교체를 빌미로 이렇게 부실하고 편향된 '대안'을 교과서에 반영하려고 압력을 가하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다.